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목록 (77)

## I. 사회·정치개혁 관련 (7)

- 1-01 참여정부 정치개혁의 성과와 과제
- 1-03 반부패 투명사회 구현
- 1-05 포괄적 과거사 정리
- 1-07 언론분야 개혁
- 1-02 사법제도 개혁
- 1-04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 1-06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II. 정책추진 관련 (47)

### 경제분야 (17)

- 2-01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 2-03 신용불량자 대책
- 2-0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2-07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2-09 농업 농촌 종합대책
- 2-11 자율 관리 어업 정책
- 2-1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 2-15 향만인력 공급체제 개혁
- 2-17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확산
- 2-02 금융시장 안정
- 2-04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 2-06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2-08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 2-10 쌀협상과 양정개혁의 완성
- 2-12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정리
- 2-14 선진한국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 2-16 해외자원 확보 경쟁

### 사회분야 (24)

- 2-18 노인복지 정책
-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 2-22 주민 서비스 혁신
- 2-24 건강보험 개혁
-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 2-28 여성인력개발
- 2-30 차별시정 강화
- 2-32 노사관계 개혁
- 2-34 교육격차 해소
- 2-36 사립학교법 개정
-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 2-4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 2-19 장애인 정책
-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 2-23 국민연금 개혁
-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2-27 호주제 폐지
- 2-29 성매매 방지
- 2-31 비정규직 보호
- 2-33 일자리 창출
- 2-35 교원평가제 도입
-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 통일외교분야 (6)

- 2-42 참여정부의 북핵문제 해결과정
- 2-44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
- 2-46 국방개혁 2020
- 2-43 남북관계 발전
- 2-45 글로벌정상외교
- 2-47 이라크 파병의 성과와 교훈

## III. 정부혁신 관련 (21)

- 3-01 정부혁신의 확산과 관리
- 3-03 정부 성과관리시스템 혁신
- 3-05 국민참여형 민원제도 개선
- 3-07 기록관리 혁신
- 3-09 참여정부 인사혁신
- 3-11 고위공무원단도입과 공직개방
- 3-13 균형인사 정책
- 3-15 제주특별자치도
- 3-17 교육자치 정책
- 3-19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 3-21 새로운 도전, 국가위기관리
- 3-02 정책품질 관리체계의 마련
- 3-04 정부조직과 기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 3-06 전자정부시스템의 구축
- 3-08 온나라 정부업무관리시스템
- 3-10 정무직 및 공공기관 인사시스템 혁신
- 3-12 공무원 성과관리 및 훈련시스템 확산
- 3-14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 3-16 자치경찰제 추진
- 3-18 주민 직접 참여제도
- 3-20 정책홍보시스템 혁신

## IV. 청와대 개혁관련 (2)

- 4-01 대통령비서실의 변화와 혁신
- 4-02 국정과제위원회의 설치와 운용



#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2008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발 간 사

참여정부가 혁신과 통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지 5년, 이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난 5년은 말 그대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혁신과 통합의 길목마다 어김없이 반발과 저항, 분열 세력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왜곡과 호도 앞에 정부의 어떤 정책 활동도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혁신과 통합 과정에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은 참여정부의 의무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특정 정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추진 당시의 목표와 정책 환경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우여곡절과 해결과정, 해결방법도 가급적 상세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이런 고민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추진되었던 핵심 정책 중 77개 과제를 선정, ‘정책과정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명칭을 ‘정책보고서’로 한 것도 일반 백서 처럼 정책의 진행 일지나 자료를 모아 놓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보고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정책보고서 작업은 청와대 비서관실별 집필 T/F팀과 정책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보다 생생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 전·현직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과 비서관, 전·현직 장·차관과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단체, 국회의원 등을 직접 또는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회 속기록과 언론 보도, 각계의 성명서와 기고문을 수집하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책보고서는 일반 백서와 차별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정책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책추진과정의 우여곡절과 정책에 관여 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국정외 소중한 경험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과정 중심의 기록은 ‘사적 기억’을 ‘공공의 기록’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과의 나열이나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의 다양한 찬반 논란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77개 과제 중에는 성과가 미흡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자료와 논증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정치적 곡해를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차기 정부에 넘겨줄 인수인계서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권력만의 인수인계가 아닌 정책의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정외 소중한 경험을 공유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정책보고서는 크게 사회정치 개혁, 정책추진, 정부 혁신, 청와대 개혁 등 4개의 대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대주제는 다시 사회정치개혁 분야 7개 과제, 정책추진 관련 경제 분야 17개, 사회분야 24개, 통일외교 분야 6개 등 47개 과제, 정부혁신 분야 21개 과제, 청와대 개혁 분야 2개 과제 등 6개 분야 총 7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작성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서려 있습니다. 집필을 책임진 청와대 각 비서관과 담당 행정관, 부처의 담당 공직자,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필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물론 국정과제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과제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외부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의 전·현직 장차관이 해당 과제를 직접 검토하거나 인터뷰에 적극 참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현직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해 주었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는 지난 2년 2개월 동안 정책보고서 집필 과정에 참여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전·현직 공직자, 국책 및 민간 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발간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책보고서는 국민은 물론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 과제를 PDF 파일 형태의 CD로 제작 배포할 것입니다. 청와대 브리핑 및 정책기획위원회 홈페이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올려 무상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각 연구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의 재배포 및 연구자의 자유로운 인용도 허용할 것입니다.

정책보고서를 내놓는 지금 이 순간, 정책과정 중심의 새로운 백서 문화를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냉철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떠나 정책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으려 했던 참여정부의 노력과 진실이 있는 그대로 읽혀지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조언,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를 국민께 바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2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김 병 준



# - 목 차 -

<b>제1부 중소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b> .....	1
제1장 중소기업을 중심에 두는 경제정책 .....	1
제2장 중소기업정책의 어제와 오늘 .....	4
제3장 새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는 중소기업의 미래상 .....	10
<b>제2부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b> .....	15
제4장 기득권층 반발 극복, 새 공공구매제도 .....	15
제5장 시장친화적 벤처생태계 조성 .....	25
<b>제3부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극복의 길</b> .....	34
제6장 선택이 아닌 필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34
제7장 단계별·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	45
제8장 서서히 열매맺는 최초의 재래시장 정책 .....	56
<b>제4부 정책수요자를 배려하는 현장행정 구현</b> .....	65
제9장 고객만족을 위한 정책정보 전달체계 혁신 .....	65
<b>제5부 ‘글로벌 강소기업’ 의 비전 2030</b> .....	76
<부록>	
1. 참여정부 중소기업정책혁신 대책회의 추진일지 .....	79
2. 참여정부 전후 중소기업정책 비교표 .....	82
3. 중소기업의 정책 활용 및 성공사례 .....	85
4. 역대정부의 주요 중소기업정책 변천사 .....	100





# 제 1 부 중소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제 1 장 중소기업을 중심에 주는 경제정책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마디로 절대적이다. 취업인구 열명 가운데 아홉 가까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실정이 이렇다 보니 역대 어느 정부도 '중소기업 육성'을 외치지 않은 적이 없다. 지난 50여 년 동안 역대 정부는 끊임없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왔으며 어느 정도의 외형적 성장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과연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체질을 강화하는 질적 성장까지 이루어냈는가 하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이란 말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중소기업의 산업비중이 아직도 취약하고 대기업의 존형이며, 인력, 자금,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시장의 여건이 열악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정책은 경제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흔히 후순위로 미루어지거나 정치적 이슈로 다루어졌으며 구조적·체계적 대응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단기적인 미봉책 위주였던 까닭에 정책역량이 효과적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중소기업을 지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의 신뢰를 얻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노력은 중소기업의 양적 저변 확대에는 기여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고 혁신을 유도하여 질적인 구조 고도화를 달성하는 성과는 미흡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중소기업정책이 과거와는 달라야 하며, 정책이 정부의 자기만족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중소기업정책 혁신을 추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해결돼야 소득격차와 양극화의 문제가 해소되고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승부를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중소기업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고 중소기업정책 소관부처만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정책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 혁신은 순탄치 않았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몇 차례의 대통령 보고 자리는 대통령의 강한 질책으로 끝났다. 대통령의 지적은 “정부나 지원기관이 일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와 지원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참된 정부 역할론을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원인 분석도 제대로 안 된 채 정책의 결과에 대한 확신도 없이 상황에 끌려 미봉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수립 방식에 대한 근본적 쇄신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 과정이 참여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의 모색기라 할 수 있다.

짧지 않은 모색과정을 거쳐 참여정부의 시장친화적 중소기업정책 혁신은 점화되었다. 그 시발점은 2004년 7월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문제의식에 비추어보면 기술·인력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총체적·구조적 정책 대응으로서는 수준과 내용이 여전히 미흡했으나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가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로부터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개별 부처 차원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대응에 나서는 정책수행 방식이 확립되었다.

이후 2004년 12월의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2005년 1월의 ‘중소기업정책 혁신 12대 과제’, 2005년 5월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영세자영업자 대책’, 2005년 6월의 ‘벤처활성화 보완대책’,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등 참여정부 중소기업정책이 연이어 제시되었다. 이 모든 정책들은 철저한 실태 파악을 통한 원인 분석과 이에 대응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근거한 정책 수립은 이제 중소기업정책에 있어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책방향은 기존 정책의 보완과 함께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정책이 나름대로 자기완결성과 효과성을 중시하여 만들어졌지만 전달체계상의 문제 등으로 현장과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단위의 성과 점검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정책은 완결판이 있을 수 없으며, 상황과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정책의 점검·평가·사후 관리를 통해 끊임없이 보완·수정하여 완성도를 높여나가야만 참여정부 이후에도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장 중소기업정책의 어제와 오늘(보호에서 경쟁으로)

### 1. 참여정부 이전의 중소기업정책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정책은 1960년대부터 법률적 체계를 갖추고 추진되기 시작했다. 1961년 8월 중소기업은행 설립에 이어 그해 말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이 제정되었고, 1966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산업 육성'이 산업정책의 기초를 이룬 시기로서 중소기업은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이 1983년에 이르러 제정되게 된 것도 이 같은 정책 기초와 무관하지 않다.

현대적 의미의 중소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이다.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부품·소재 생산부문으로서의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여, 1975년 기계류·부품 국산화시책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도 제정되었다. 1978년에는 「중소기업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1979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설립(1976), 시설근대화 투자 원활화를 위한 중소기업 범위 확대(1976) 등 관련법령의 제정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보호·육성 위주의 중소기업정책들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된 시기로 분류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기금에 의한 시설근대화자금에 당시로서는 막대한 규모로 지원되기 시작했으며, 1981년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1982~1991)」 수립을 계기로 다양한 중소기업 보호·육성시책들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시책으로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정(1982),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의 본격적 실시(1982), 유망중소기업제도(198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1984),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 원활화를 위한 한국은행 재할인제도 도입(1984),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제도(1985) 등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들어서는 「공업발전법」 제정(1986)을 계기로 산업지원 방식이 기

능별 지원 위주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 지원시책도 기술개발 등 기능별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기계류, 부품·소재 국산화지원제도가 재정비·확충(1986. 3)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1986. 5)된 것도 이와 같은 정책기조의 변화와 맥을 같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989년에는 1980년대 말의 임금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완화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WTO체제 출범에 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체계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경제 전반의 자율화·개방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정책이념도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기술개발 등 기능별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1993) 등 기술개발 관련 시책이 강화된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화 투자가 중심이 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1993)이 주된 시책으로 추진되었다. 경쟁제한적 제도의 축소·정비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고유업종제도 및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축소, 한국은행 재할인제도가 총액대출한도제로 전환된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1990년대 중소기업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다원화된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섹터별 시책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계기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1994)되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1997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이 각각 제정되었다.

1990년대 중소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벤처기업 육성시책을 포함한 중소기업정책이 경제정책의 중요한 부문으로 자리잡기 시작하고 중소기업 지원행정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는 1996년의 코스닥시장 개설, 1997년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등 외환위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되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부터였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도 강화되었다. 1996년 2월 중소기업청이 발족된 데 이어 1998년 4월에는 중소기업정책개발기능의 강화와 관련부처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협의·조정 및 평가를 통한 중

소기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정책의 목표와 영역은 우리 경제의 발전전략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큰 흐름은 중소기업을 경제적 약자, 정책적 배려 대상으로 인식하던 시각에서 시장에서의 경쟁 주체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점차 증대되었다. 이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책 기조가 강조되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즉, 1980년대까지는 ‘보호와 육성’이라는 정책 기조를 근간으로 금융지원 일변도에서 기능별 지원이 점차 확충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자율과 경쟁’을 정책 기조로 표방했다. 그러나 정책의 내용에서는 ‘보호적 지원’의 색채가 부분적으로 약화되는 수준에 머물러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책 기조가 세부 시책에까지 충실하게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장기적·구조적 정책이 미흡한 채 경기상황에 떠밀린 일과성 미봉적 정책 대응이 반복되었다.

참여정부 이전의 중소기업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었으나 중소기업정책의 위상이 높아지고 내용도 다양해지는 모습으로 진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문제는 개선되거나 해소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양상을 보인 것도 사실이었다. 이는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 문제가 단지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복잡 다양한 과제들과 맞물려 있어 중소기업정책 차원의 해결 노력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데서 연유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중소기업정책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만족할 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온전히 설명되지는 않는다. 중소기업정책은 정책이 필요한 상황과 정도, 정책의 경제·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위상과 내용이 규정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중소기업정책의 모습과 내용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여정부 이전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에 소홀했고 이는 처방의 효과를 떨어뜨린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다.

참여정부 이전의 중소기업정책은 정책의 방향성, 내용, 지원방식 등에서도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중소기업의 다양한 유형과 발전단계를 감안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접근이 미흡했다. 정책대상의 특성과 유형, 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내용의 지원에 머물러 자금, 기술, 판로, 인력 등 다양한 분야

별 지원수단이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

둘째, 발전 가능성 위주의 집중지원이 미진했다. 보호·육성 차원의 보편적 지원방식을 취한 까닭에 발전 가능성은 크지만 위험도가 높은 창업·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보호 위주 정책이 정책 취지와 달리 역효과를 초래했다. 시장에서의 건강한 경쟁과 다양한 제휴·협력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도모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보호에 치중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넷째, 정책의 사후평가와 실효성 확보에 소홀하여 정책의 시의성과 연속성을 제대로 견지하지 못했다. 기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계속 추진되었고, 시의성 없는 정책을 새로운 수요에 맞게 전환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다섯째, 정책 역량이 효율적으로 조정·통합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저해했다.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데 반해 효율적인 통합·조정이 어려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 2. 참여정부는 무엇에 주목했는가

참여정부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기업간 경쟁이 자본이나 노동 같은 생산요소보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활용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는 지식기반형 경제구조로 전환되는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의 흐름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여전히 저가경쟁에 의존하는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머지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차별화된 독자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에서 과당경쟁을 지속하다 보니 자연히 수익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생산성 향상마저도 둔화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가 노동과 자본의 투입 규모가 아닌,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으며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급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도 보호와 육성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는 무엇보다도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주체'로 거듭나도록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했다.

또한 상생관계 구축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발전 역시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는 정책이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대기업도 강해지고, 결국 나라 경제가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인식 변화이다. 역대 정부가 한결같이 '중소기업 육성'을 외쳐왔으나 중소기업 문제는 역대 대통령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들의 최고 관심사는 때로는 중화학공업이기도 했고, 때로는 정치 혹은 정권의 안정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절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7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서 중소기업정책 조정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대책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실제로 중소기업정책 관련 회의를 여러 차례 직접 주재하면서 정책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왔다.

지금까지 역대 어느 대통령이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인 적이 있었는가. 물론 대통령이 경제의 모든 분야를 일일이 챙길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는 관련 정부부처 장관들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의 업무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확실한' 효과가 있음은 부인



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CEO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파고드는' 방식으로, '제목만 있는' 정책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정책,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이 아니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알찬' 정책이 되도록 중소기업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 제 3 장 새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는 중소기업의 미래상

### 1. 새 역할모델을 찾아라

참여정부 출범 당시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쟁환경과 정책환경은 대내적으로는 성장 축의 다변화 필요성 및 경제 민주화의 요구가 증대하고, 대외적으로는 무한경쟁에 따른 혁신과 효율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정책 대응의 질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었다.

우선 중소기업은 대내적으로 경제 양극화 현상의 구조화 추세 속에서 대기업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보호·육성의 객체로부터 자생적 성장과 경쟁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전 속에 놓여 있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 경제제일주의와 고도성장주의를 지향하며 정부 주도하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지속되면서 대기업의 비효율성과 비합리적인 지배구조 문제가 나타났고, 중소기업은 날로 심화되는 경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그동안 우리 경제의 경쟁력 원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간 분업관계가 약화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이는 부품·소재 공급기능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종속된 단순 하청기업으로 전락하여 상생적 분업관계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혹은 협력관계로 중소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업, 다른 중소기업,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각종 단체 그리고 고객, 경쟁사 등을 포괄하는 기업 생태계 및 시장 경쟁질서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경제 구조조정의 영향 등으로 중소제조업, 서비스업에서 한계집단이 늘어남과 동시에 기업도산, 신규 고용 부진 등에 따라 경쟁탈락자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개인서비스 부문으로 대거 진입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 진출이 급속히 늘어나 경쟁은 심해지고 수익성은 오히려 낮아지는 문제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사회적 안정성이 약화되고, 재정, 금융 등 거시경제정

책과 중소기업정책 등 산업정책의 효과가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게 지식정보화, 다양성·개방성·창의성·혁신성이 강조되고, 환경·에너지 문제 등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은 새로운 역할 모델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고용창출, 구조고도화 간의 선순환구조 진입에 중요한 기여와 역할을 해야 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은 혁신에 기반한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정책 대응에 있어 지난 40여 년간 지속된 대기업 중심의 고착화된 경제구조 아래 누적되어온 중소기업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구조적 대응 노력을 요구 받게 되었다.

## 2. 작지만 강한 선진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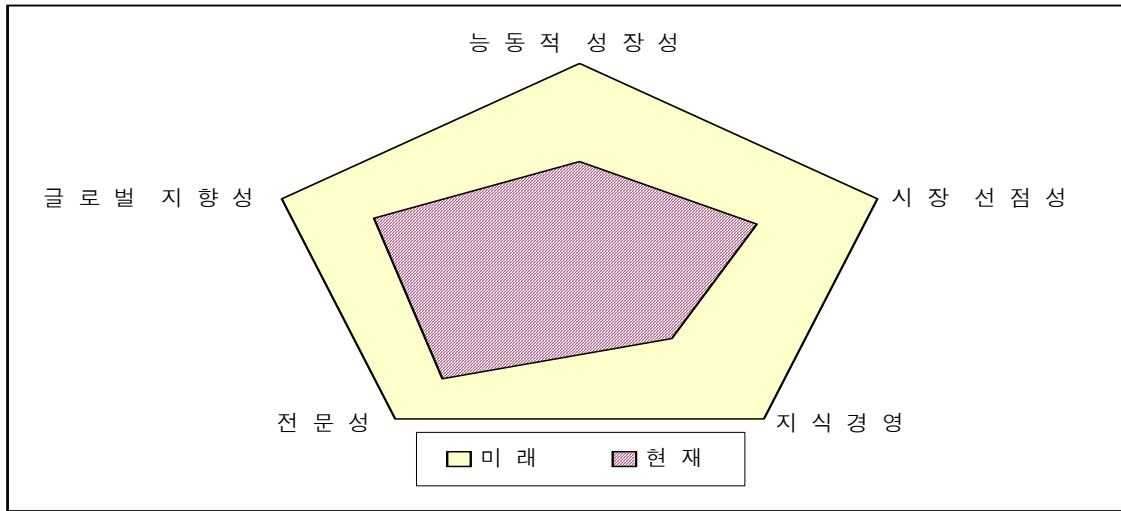
참여정부 중소기업정책의 비전은 '중소기업을 한국의 선진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주도형 경제의 능동적·혁신적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핵심 정책 목표는 '혁신역량 강화 및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으로 집약된다. 참여정부 중소기업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중소기업이 반복되는 자금난, 인력난, 판로난에 허덕이는 연명형 경영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당당한 경쟁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부문이 우리 경제의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작지만 빠르고 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중소기업정책의 비전 및 목표】



또한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을 충실히 반영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방향성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모델 구축을 지향했다. 정책환경 및 경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중소기업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는 능동적 성장성, 글로벌 지향성, 시장 선점성, 전문성, 지식경영으로 집약될 수 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 추구할 미래 핵심가치의 정수(精髓)는 능동적 성장성이라 할 수 있으며, 능동적 성장성은 지금까지의 대기업 의존적 성장구조에서 벗어나 대등하고 독립적인 위상 속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능동적 기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능동적 성장성은 성장의 방식(경로)과 내용(수단)에 의해 뒷받침되며, 성장의 방식은 글로벌 지향성과 시장 선점성, 성장의 내용은 전문성과 지식경영에 기반한다.

### 【중소기업의 5대 미래 핵심가치】



### 3.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의 핵심축

참여정부는 중소기업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참여정부 정책기조의 핵심적인 특징은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혁신역량 강화,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로 연결되며, 혁신지향적 정책기조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정부는 중소기업 부문을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전략의 핵심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및 구조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으로 연결되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는 중소기업정책의 목표와 지원방식의 전환을 적극 도모했다. 규모에서 오는 한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불리함을 보완하되 일방적 보호를 지양하고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질적 지원을 강조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추구하고자 했다. 중소기업 지원 내용과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여 금융, 인력 등에서 단순한 비용요인의 절감을 위한 지원보다는 접근기회의 확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과유발형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결

과적으로 정부 지원이 시장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구조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금융지원체계 개편, 정책정보 전달체계 혁신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참여정부 이전과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 비교】**



## 제 2 부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 제 4 장 기득권층 반발 극복, 새 공공구매제도

#### 1. 전혀 공평하지 않았던 공공구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중소기업 다 망하라는 겁니까?”

“정부가 폐지를 강행한다면 죽을 각오로 싸울 겁니다”

“밤길 조심하슈!”

2004년 여름, 대전 중소기업청에는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정부가 단체수의 계약제도를 폐지한다는 소식에 흥분한 일부 중소기업인들의 항의전화였다. 도대체 왜 중소기업인들이 자신들을 지원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정부기관에 항의전화를 하고 폭언까지 불사하게 되었을까? 바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존재 문제 때문이었다.

물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는 개인과 기업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들도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각종 시설공사 등을 발주한다. 이것이 바로 공공구매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공공구매는 공평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경쟁’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시행했던 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체수의계약제도였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가 시작된 것은 1965년 단체수의계약제도 가 도입되면서부터였다. ‘수의계약’이란 글자 그대로 상대방을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즉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란 ‘정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단체, 즉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계약 체결 후 조합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물량을 배분해주는데, 일반 경쟁입찰보다 가격과 결제조건이 좋아 가장 강력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꼽혀왔다.

그러나 경쟁 제한적, 보호 위주의 단순한 팔아주기식 시책이다 보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판로지원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중소기업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던 것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대기업이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품질에 의한 가격 결정이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기술개발로 특허권을 획득한 제품조차 물량배정을 거부당하는가 하면 조합원들이 특허권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도리어 피해를 보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이나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게 되며, 더 많은 물량배정을 받기 위해 외형 확장에 주력하는 나머지 자체 경쟁력 저하는 물론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기도 했다.

또한 공정한 물량배정이라는 운영상의 원칙으로 한계기업이 퇴출되지 않는 가운데 다른 부문에서 퇴출된 기업들의 유입을 촉진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했으며, 일반경쟁계약이나 중소기업간 경쟁계약에 비해 월등히 높은 낙찰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예산이 낭비되는 등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구매담당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그런 점이 중소기업간 경쟁이나 신기술우수제품 구매제도 등 여타 공공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나아가서는 조합이 권력화하고 소수 특정기업이 물량을 독식하거나 기관과 특정 그룹 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등의 부작용도 속출했다. 2003년의 통계에 따르면 단체수의계약 참여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0.45%,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14.2%에 불과했다. 특히 상위 20% 업체가 전체 물량의 77.3%를 납품했던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소수 중소기업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는 제도로 변질된 것이었다.

## 2. 소수의 특혜에서 다수의 이익으로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참여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운용과제의 세부계획으로 「제2차 카르텔일괄정비법(가칭)」을 통하여 경쟁제한적인 제도를 일괄정비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6월 23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중소기업정책 전반에 관한 개편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전면 개편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때 대통령은 단체수의계약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기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쟁제한적인 보호제도로 평가되었던 단체수의계약제도, 고유업종제도, 지정계열화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구매제도의 경쟁촉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의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신공공구매제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후 2004년 4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체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공공구매제도 전면개편을 위한 작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정부·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 등 16명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 개편을 모색했으며,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2004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구매제도 혁신의 방향은 진입제한 등 과도한 보호와 물량배정을 통해 소수 특정기업에 과도한 수혜를 주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폐지하되, 불특정 다수 중소기업

업을 위한 시장은 큰 폭으로 확대하고, 적절한 가격과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나친 수주경쟁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향후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제도를 초기시장 확보와 민간시장 진입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혁신 의지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 3. 기득권층의 반발로 험난했던 제도개편

그러나 수십 년간 제도에 편승하여 별다른 노력 없이 특혜를 누리오던 기득권층의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잘못된 제도를 없애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워낙 오랜 세월 유지되어온 제도이다 보니 정부로서는 조합의 반발을 의식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개혁의 핵심 장애요인은 기득권층의 반발이었다. 그러한 반발에 내재되어 있는 기득권의 구체적인 이해관계는, 첫째 수의계약 방식에 따른 비교적 높은 수익성 확보, 둘째 조합의 수수료 수입, 셋째 물량배정 방식에 따른 조합원의 이해관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길어질 경우 혹시 과거처럼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최소화하여 바로 폐지하는 쪽으로 정부는 이미 입장을 정리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조합들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제도를 폐기하려 하느냐면서 “이 제도마저 폐지할 경우 대기업에 의해 언젠가는 이 시장마저 잠식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여야 구분 없이 조합 편을 들었다. 국회는 정부의 폐지안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참여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웃 일본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왜 우리나라에서는 없애려 하느냐는 업계의 항의도 있었다. 그릇된 인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중소기업청은 2004년 4월 현장 확인을 위해 조합이사장 등과 함께 직접 일본을 방문하여 관련 기

관을 조사한 결과 일본에는 아예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가 발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제도 덕분에 이익을 취해온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에 제도 개편과정은 험난할 수밖에 없었다. 2004년 6월 21일 조합대표 등에 의해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대규모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후 비대위를 중심으로 조합측의 집단행동이 계속되었다.

2004년 7월 30일, 정부는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제도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강경파들의 방해로 무산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4500여 명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들 가운데 일부는 단상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 공청회의 진행을 막았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은 먹살잡이를 당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중소기업청을 폭파하자!”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결국 제도 개혁에 성공했다. 1차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정부는 8월 24일 2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업계, 학계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과 업계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주된 기득권층인 업종별 조합의 이사장 간담회와 실무책임자급 워크숍, 공개토론회는 물론, 제도개편 시안 관련 협의를 위해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유관기관 담당관 회의와 관계부처 과장급, 국장급 조정회의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으며, 총리실 국정현안조정회의에도 보고하여 논의되었다. 같은 해 7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활발한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이해관계는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했다. 첫째,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비교적 높게 보장되었던 수익성의 저하 문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의무화와 의구매목표비율제도, 공사용 자재의 직접(분리)구매 확대 법제화 등을 통해 공공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한적 최저가제를 통

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둘째, 조직적 저항의 주요 원인이었던 협동조합의 수수료 징수를 통한 수익원 축소 및 조직력 약화 문제의 경우, 기존 협동조합의 유지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공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셋째, 물량배정 방식에 따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개선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한편 공공구매액의 대폭 확대와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1965년을 시작으로 무려 40년간 유지되어온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간 혜택을 누려왔던 일부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인들에게는 더 큰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 4. 또 다른 장벽, 정부 부처간 갈등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가진 협동조합과 관련 중소기업의 강한 반발이 지속되었으나, 정부와 관련 기관, 학계, 연구계는 물론 시민단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자원위원회까지 합치된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법률 개정 이후 정부 부처간의 업무와 관련된 갈등은 또다른 장벽으로 남아 있었다. 조합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인해 뿌리깊이 남겨진 협동조합에 대한 불신, 건설업계와 중소기업제조업계 사이의 오랜 갈등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부처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협동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는 스스로 경쟁체제에 적응하기 어려운 영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었으나, 관련기관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한편, 공사용 자재의 분리구매 문제는 건설업계와 중소기업제조업계 사이에 첨예한 이해가 관련된 문제로 소관 부처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최저가 낙찰제 또한 국가 재정을 담당할 부처에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이러한 부처간의 갈등,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인한 중소기업계와 협동조합의 불안감, 전체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 혁신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

움과 향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구조적인 개편 일정 등을 부처간 실무협의, 경제 장관회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에 이해를 구했다. 이러한 2년간의 노력을 통해 관계부처와 관련 이해집단의 양보와 협조를 이끌어내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이해집단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은 정부 부처간에도 오랜 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정책의 전면적인 혁신을 위해 40년간 지속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기득권인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는 대안으로서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만 될 과제를 2년간에 걸친 토론과 협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게 된 것이다.

## 5. 보호에서 경쟁으로, 5조 시장에서 12조 시장으로

과거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근간으로 한 공공구매제도는 정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과도한 보호 위주, 행정편의 위주의 팔아주기식 성격이 큰 제도였으며 이러한 공공구매제도의 전면 개편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우선 참여정부는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경쟁원리를 도입했다. 첫째,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제도로 전환했으나,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요구함으로써 수의계약을 통해 손쉽게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이 의타심을 버리고 기술개발 노력과 원가절감 등 기업혁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즉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제도의 의무화, 의무구매비율제도와 함께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용 자재의 분리구매제도의 법제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도입 등은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공공구매제도 혁신의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개편이다. 정부의 제도개편 관점을 공공기관의 구매기피 요인 해소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인 제도운영 효과를 도모했다. 즉,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자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성능인증 및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특성상 수의계약으로 인한 구매자 책임문제가 구매확대에 중요한 걸림돌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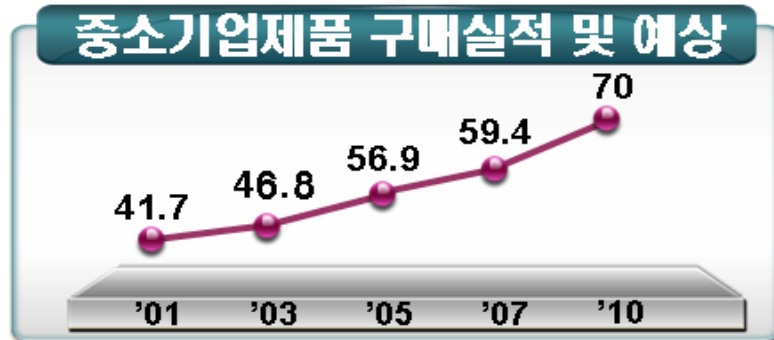
한편, 제도의 운영에 있어 공공기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한 점은 최근 기업경영 개념을 도입한 공공기관의 환경 변화와 부합된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구매요구는 결국 공급자인 중소기업과 수요자인 공공기관 모두의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어왔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공공구매에 있어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마련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조달청에 내자물품 공급자로 등록된 17만여 등록기업 중에 제조업은 2만개사에 그치고 있다. 즉, 실제 건설한 생산 활동과 기술개발 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보다는 오로지 수주에 열중하는 주변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차지함으로써 중소제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도록 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공공조달 부문에서도 값싼 해외 제조 물품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정해서라도 국내에서 직접 제조·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납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주변을 맴돌며 수주 이후 하청생산하는 일부 전문 수주공급기업의 부당 하도급을 차단하여 중소제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경쟁입찰 구매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행정력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나게 된다. 새롭게 도입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매행정 업무를 온라인화·시스템화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DB'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요구를 적절하게 파악·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향후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단체수의계약제도 하에서는 약 5조원의 공공구매가 이루어졌던 데 비하여 신공공구매제도 하에서는 제도의 의무화로 인해 해당 품목에서만 약 12조~15조원의 규모로 공공구매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도입과 직접구매제

도의 확대 등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2007년에 59조 4천억원, 2010년에는 70조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중소기업청

한편 제도 수혜층의 반발은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수요자의 실질적 편익을 반영한 대안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측면에도 상당부분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책 혁신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준비가 미흡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 6.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발판으로

향후 정부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분리구매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리발주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부처가 분산 운영하고 있는 각종 우선구매·수의계약제도를 통합,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에 적극 나서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함으로써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에 의한 판로지원을 통해 일정 기간 혜택을 받는 동안 자생력을 길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구매 졸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개편된 공공구매제도 역시 일부 중소기업만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면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는 정책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폐단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연속하여 일정 액수 이상을 낙찰 받은 업체 또는 누적 낙찰액이 일정한 액수 이상인 업체는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기회를 주지 않는 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미국의 조달지원관(Procurement Center Representatives; PCRs) 및 하도급지원관(Commercial Market Representatives; CMRs)과 같이 구매현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조달 체계와 관련하여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가 바라는 적정한 가격 산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선정 방식은 운이 좋은 기업이 낙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예정가격과 추정가격은 기관의 예산에 억지로 맞추는 형식으로 결정되어 실제 원가와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방식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원가관리방안 마련, 선진 조달행정과 공공조달 부문에서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입체적인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



## 제 5 장 시장친화적 벤처생태계 조성

### 1. 다시 벤처다

1990년대말 뜨겁게 달아올랐던 벤처 열기는 2000년 후반부터 급속히 식어만 갔다. 비리에 연루된 벤처기업의 CEO들이 줄줄이 철창 신세가 되고, ‘버블’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가운데 경기마저 위축되어 벤처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벤처라는 단어는 곧 부정부패, 한탕주의, 머니게임 따위를 연상케 했다.

참여정부의 출범 시기는 벤처의 거품이 꺼지면서 벤처생태계의 침체가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때였다. 당시 벤처는 누구나 언급을 피하고 싶은 단어일 정도로 벤처산업 기반 자체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벤처정책의 공과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으며, 정부 내에서도 과거 정책의 비판적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 【벤처정책의 공과에 대한 상이한 입장】

부정론	긍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벤처거품 조장 및 벤처금융의 투기시장화</li><li>▶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현상 초래</li><li>▶ 비벤처부문과의 사회적 갈등 유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창업과 기업가 정신 고취</li><li>▶ 고급·전문인력의 대기업 독점현상 해소</li><li>▶ 새로운 기업 성공모델 창출 및 경제의 활력 증진</li></ul>

일부에서는 ‘도대체 벤처란 게 뭐야? 왜 벤처를 지원해야 하지?’하는 식의,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극단적 회의론도 있었다.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벤처기업의 이미지와 신뢰가 추락한 상태에서 벤처기업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간 컨센서스의 도출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주창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벤처기업은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였다. 먼저 벤처업계 스스로 치열한 자기반성과 함께 미래

지향적 이정표를 만드는 노력이 시작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을 위한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었다. 벤처기업협회는 협회내 진지한 토의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Venture Again'이라는 슬로건 아래 벤처산업 재도약을 위한 10대 어젠더를 제시했고, 이는 참여정부 벤처정책 논의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후 국회, 정부 관련부처 등에서 여러 차례의 공식·비공식 간담회를 거치면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점차 호응을 얻기 시작했고, 이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시장친화적 벤처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 비전으로 구체화되었다.

참여정부의 벤처정책은 정부의 무원칙한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고위험·고수익(high risk - high return)이라는 벤처의 속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성장 토양의 조성을 지향했다. 이는 정책 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얻은 학습효과를 토대로 성숙된 제2세대 벤처정책을 표방한 것이다. 또한 벤처정책의 유용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벤처산업 육성의 무대와 주체는 시장이라는 정책 철학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역동성과 다산다사, 고위험·고수익이라는 벤처기업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창업·성장·구조조정이라는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 확충 및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 2. 시장친화적, 맞춤형 지원

정책의 틀이 갖추어진 것은 2004년 11월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간금융기관장 간담회를 통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등 경제부처 기관장들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대표자들은 벤처기업 대표들과 열띤 토론을 벌여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당시 "장맛비에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기 위해 기름을 붓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경제부총리의 선언과 함께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그해 12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벤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후속대책으로 2005년 6월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이 마련되고, 8월에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되어 참여정부의 벤처정책은 기본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연장선상에서 2006년 6월 벤처캐피털 선진화 방안이 마련되었고, 시장친화적으로 개편된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벤처특별법

령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에서는 벤처 투자기반 확충, 코스닥시장 활성화, 벤처캐피탈의 역량 제고, 정보유통의 활성화, 패자부활의 기회 부여 등을 추진했고, 보완대책으로 투자재원 확대 등 창업초기기업 지원 강화, 경영지배목적 투자 허용 등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제도 보완 등과 같은 경영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2007년 1월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는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자체 보유한 기술·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을 통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사업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교원·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최고 6년까지 휴직을 허용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도 부여하는 등 벤처생태계의 기술창업 기반을 대폭 강화했다.

참여정부의 벤처정책에서는 시장친화, 시의성 제고, 수요자 지향 등이 정책의 키워드를 이루고 있다.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시장친화적 성장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과거 정책이 벤처산업의 양적 확대와 벤처투자시장의 초기 형성에 기여한 반면, 정부의 과도한 직접 개입과 시장 중심의 기업평가 시스템 미비 등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 기반 구축을 위한 1조원 모태펀드 조성, 벤처캐피탈의 역량 제고, 벤처확인제도의 시장친화적 개편, 코스닥시장의 역할 제고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시장친화적 성장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된 벤처기업 선별기능을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개편하여 벤처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형태로 인정 요건을 개정했으며, 정부(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기관으로 넘겼다.

【벤처기업 선별요건 개편 내역】

벤처유형	종 전	개 편
1단계	혁신능력평가	폐 지
2단계	①벤처투자기업	주식투자 10% 투자기간 6월 창투자, 신기술 금융사 · 추가 : 최소투자금액 (5천만원) · 추가 : 벤처투자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②연구개발기업	R&D비율 5% 이상 · 추가 : 사업성 평가 우수
	③신기술평가기업	기술평가 우수 폐 지
	<신 설>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 기술평가보증기업 (기보) · 기술평가용자기업 (중진공) - 8천만원, 총자산 10% 이상

둘째,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정책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을 지양하고,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창업단계에서는 초기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역할을 하는 벤처캐피탈의 역량 제고나 투자재원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성장단계에서는 산학협력, 판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성장·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셋째, 수요자 관점을 충실히 반영한 정책이었다. 특히 2004년 12월의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은 패자부활제 등 수요자인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정책화함으로써 벤처업계의 절대적 지지 속에 정책의 원활한 추진여건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3. 벤처 확인, 정부에서 민간으로

한국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미국처럼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속에서 금융시장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에 기반하여 추진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낮은 토양과 기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정책이다. 시장이 자원배분 기능을 통해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여건에서 누군가가 정책대상을 선별해야 하고, 그 기능을 상대적으로 공신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부 부문이 수행했다. 문제는 그 효율성과 지속성에 있다.

정책의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선별기능 수행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시장을 통한 선별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다. 이 때문에 벤처 확인제도는 항상 벤처정책 논란의 핵심 이슈였다.

정부는 2005년 6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벤처기업을 지정하기보다 시장에서 선별·검증되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벤처확인제도의 개편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벤처기업을 인위적으로 규정하여 지원한다면 시장왜곡을 초래하여 제2의 벤처버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개입은 시장이 판별할 수 있는 참고사항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거나 시장의 선별 기준과 역할을 아직 신뢰하기 어려우니 그동안 정부의 확인제도 운용과정의 경험을 반영하여 개선·존치하자는 입장이 업계를 중심으로 개진되었다.

결국 이 문제는 벤처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는 공신력 있는 확인제도의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좀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정부내 합의가 모아져 2005년 8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위험부담 주체인 금융기관에 의해 사업성과 기술성을 검증 받는 것을 핵심적인 벤처기업 요건으로 하고, 확인업무를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형태로 2006년 6월 제도 개선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벤처확인제도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시장친

화적인 제도 운용을 도모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은 과제는 시장이 중심이 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통해 풀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성공하면 정책대상 선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지만, 향후에도 시장을 대신하는 정부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정책 자체가 좌초할 수도 있다. 이것이 시장 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까닭이다.

#### 4. 벤처, 다시 활기를 찾다

2004년 12월의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은 수요자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정책 접근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그 과정을 간추려보면 벤처업계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 및 대안 모색, 벤처업계의 문제 제기를 정책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다양한 의견 수렴, 수요자 입장이 충실히 반영된 벤처활성화 대책의 탄생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책 수립에 있어 '참여적 해법 모델'이라 불려도 좋을 것이다.

이 사례는 그동안 정책 입안과정을 둘러싼 몇 가지 숙제를 푸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첫째, 정책 당국자만 만족하는 일방통행식·공급자 편의적인 정책 생산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공론화가 미흡할수록 정책 담당자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수요자가 아닌 정책 당사자 입장에 있게 되므로 무책임한 독단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수요자 입장이 충분히 개선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사유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유를 확인하게 되므로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져, 정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이러한 절차는 정책 입안에 드는 거래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매우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문제 발생시 신속한 정책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정책 환경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정책생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정책 입안의 참여적 해법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마련을 가능케 해 정책의 추진동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성장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성과도 벤처기업의 원활한 활동 및 성장을 뒷받침하는 시장기구나 투자 주체의 활동성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직 전반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정책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모태펀드 조성,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지 고조 등으로 벤처투자가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이 추진되기 전인 2004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의 신규투자액은 7,770억원에서 2005년에는 9,577억원으로 늘었고, 2006년에는 1조 231억원을 기록하여 벤처투자 1조원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코스닥시장의 투자 분위기가 점차 활기를 띠면서 벤처기업의 자금 공급처로서 활용도가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일 평균 거래액이 2004년 631억 원에서 2005년에는 1,789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코스닥에 신규로 진입한 벤처기업 수도 2004년 52개사에서 2005년에는 70개사로 증가했다. 또한 IT 분야 생태환경 건전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IT SMERP(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 Revitalization Program) 정책을 통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9개의 우수 IT기업을 코스닥에 상장(해외상장 3개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 자료 : 중소기업청

이처럼 벤처생태계 조성 및 벤처투자 분위기가 활기를 보이면서 벤처기업 수가 2001년 11,392개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3년 7,967개, 2005년 9,732개로 감소하

다가 2006년에는 12,218개로 1998년 벤처기업확인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중소기업청

## 5. 제도와 현실의 괴리

이처럼 정책 추진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를 호전시키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정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정책들이 당초 의도대로 작동 되지 못한 사례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요자 입장을 정책화했던 벤처패자부활제이다. 이 프로그램은 벤처 거품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된 '기술력 있는 정직한 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벤처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정책화한 것이다. 1년 이상 경영활동을 하다 부도가 난 벤처기업 중 도덕성과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의 대표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정책 의도와는 달리 정책 시행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신청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등으로 인해 민간의 참여 실적이 극히 부진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용 불량상태에서 벗어나야 하고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채무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엄격한 도덕성 평가나 기술·사업성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했고, 지원기관 입장에서는 지원에 따른



위험 부담과 책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어려웠다.

이는 제도의 취지와 현실 적용 사이의 괴리가 정책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도의 취지 못지않게 제도의 작동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함을 일깨워준 것이라 하겠다. 아무리 정책 취지가 좋더라도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정책수요자의 불신만 초래함으로써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6. 정부정책과 시장의 조화를 향하여

시장친화적 벤처생태계 조성은 제도적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 시장 중심의 벤처산업이 정착되어 스스로 자정작용과 상승작용을 통해 벤처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는 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질서와 기업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선순환적 벤처생태계가 원활하게 작용하려면 M&A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M&A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여 또 다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경로이다. 이를 통해 기업간 전략적 제휴와 인력 등 자원의 원활한 이동, 그리고 기업들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들이 효과적으로 결집되고 재결합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M&A는 시장중심의 벤처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구성요소인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M&A를 가로막는 장애나 규제들을 과감하게 없애거나 완화하는 조치들을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M&A를 수용하는 사회적 인식과 기업문화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M&A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벤처정책은 인위적인 시장개입이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시장친화적이며 균형적인 벤처생태계 정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정부는 시장실패 분야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 기능만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시장 중심의 벤처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한다.

## 제 3 부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극복의 길

### 제 6 장 선택이 아닌 필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1.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최근들어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수출은 호황인데 내수는 어렵고, 도시와 농촌, 부자와 빈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어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대기업들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반면, 많은 중소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단가인하 등 다양한 수단으로 협력기업을 압박하고 있는데, 주로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는 구조인 중소기업은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일방적 납품거래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도 갖추기 어려웠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은 낮아지고 대기업과의 격차는 더 확대되었다.

“매년 납품단가를 내리자고 하니 도저히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이라 구두발주를 믿고 제품을 개발했더니 전화 한 통으로 발주를 취소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습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에게서 흔히 듣는 하소연이다. 실제로 2007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64.6%의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문제라고 대답했다.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는 경우도 19.0%에 이른다.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기술분쟁도 종종 발생한다.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거래를 대가로 기술을 그냥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게 ‘관행’이라고 할 정도다. 심지어는 그런 방식으로 확보한 기술자료를 계열사나 팔이 안으로 굽는 중소기업에 넘겨 제품을 개발하게 한 뒤 원래 중소기업과의 거래는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 일을 당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뭇보이면 당장 거래가 끊어질까봐 속으로만 끄끖 앓는다

는 것이다.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탈취, 납품단가 인하 같은 불공정행위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이를 정당화해왔다. 생산성 격차는 대부분 기술력의 차이에서 나온다. 그런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 격차가 커지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을뿐더러 서로 해로운 일이다. 길게 보면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그것이 대기업 자신의 발등을 찍게 된다.

우리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려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났다. 이제 성장의 원동력을 기술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가로채는 것은 그나마의 기술개발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일이다. 법에 호소해 보호받을 길이 있다고는 하지만, 돈 없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법이 손을 들어줄 때에는 이미 기술특허의 의미가 없어지기도 한다.

## 2. 상생협력은 시장 메커니즘에 반하는 정책인가

기업은 자선단체도 친목모임도 아니다. 엄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다. 정부가 기업에 손해가 되는 일을 강요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상생협력은 대기업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자율적, 자발적 참여 없이는 절대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과정에서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공급사슬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기업들 스스로 인식하고 기업들이 상생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의 독려에 의해서만 지속될 수는 없다.

시장 메커니즘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지만 시장 메커니즘 하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정책적 정보를 경제주체들에게 확산시키는 '촉진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시장 메커니즘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상생협력은 철저히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성과공유제, 공동기술개발 등은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니라 투자인 것이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전략 차원에서 상생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그래야만 상생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한 적이 없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곧 대기업의 경쟁력이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60%를 넘는다(제조업 기준). 특히 자동차 업종은 중소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 비율이 70%에 달한다. 미국이나 유럽이 약 40% 수준인 데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예로 보면 협력업체 수가 약 5000여 개에 달하고, 이들이 납품하는 부품 수도 2만개를 넘는다. 이는 외국에 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품업체에 1000엔짜리 부품을 800엔에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원가절감이 아니다. 정당하게 지불할 비용은 지불하고 세계 정상 수준의 부품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해야 한다. 안 그러면 부품업체의 이익을 완성차 회사가 빼앗는 것이다.” 라는 일본 도요타의 요시다 모리타카 수석엔지니어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기업의 국제경쟁은 더 이상 개별기업간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경쟁의 승패가 종전에는 개별기업 자체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었으나, 점차 기업간 협력네트워크의 성과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 3. 더불어 잘사는 ‘상생협력’ 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대·중소기업간 성과 격차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분위기 확산에 직접 나선 것은 이러한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와 지렛목을 놓을 자리만 준다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결하는 지렛대는 상생협력이다. 지렛목을 어디에 둘 것인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우리 경제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현안이며,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2005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대통령의 직접 주재하에 대기업 총수 및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함께 모여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왔다.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대등한 여건 속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수십년 동안 유지되어온 3대 보호정책(단체수의계약, 지정계열화제도, 고유업종제도)이 모두 도마 위에 올랐다.

2003년 6월 참여정부 들어 처음 마련된 ‘중소기업정책개편방안’에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3대 보호제도의 단계적 폐지 계획이 처음으로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보호제도를 폐지하면 중소기업계의 충격이 크고 또한 대기업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할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참여를 사전에 조정하는 ‘사업조정제도’가 보완책으로 제시되었다.

중소기업 보호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는 점차 커져만 갔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2004년 12월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수·위탁거래 공정화 대상에 기존의 제조·판매업종과 함께 건설 및 서비스업을 새로 추가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의 빈도가 가장 많았던 분야에 대해 정부의 본격적인 감시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결제조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시정조치와 함께 이를 대외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거래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게 되었다.

아울러 2006년 3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조사대상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시정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본격화했다. 종전 납품대금 결제조건 위주의 조사에서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취소 등 불공정행위 전반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대·중소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납품단가 변동, 원자재가 변동의 납품가격 반영 등 조사의 내용과 범위도 종전보다 확대되었다.

대기업의 구매수요에 맞춰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대기업이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한다. 2002년 공공기관 구매조건부로 시작되었다가 2005년부터는 대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론(Network Loan)제도도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네트워크론 제도는 협력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구매기업은 전자결제 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중소 납품업체는 계약수주와 동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인 대기업은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네트워크론을 통해 지원한 자금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대체결제제도와 동일한(0.3%) 세액공제를 받는다. 2004년 8월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10개 시중은행이 참여하여 5000여 개 협력기업에 2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영경험과 노하우 및 국내외 네트워크는 중소기업에도 소중한 경영자원이 될 수 있다. 대기업에서 퇴직한 2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대기업이 가진 경영·기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K-SCORE사업이 중소기업의 인기를 끄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박람회'가 열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구매상담, 수요기업 발굴 등 협력의 기회를 만드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등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인에게는 2006년부터 '아름다운 동행상'을 신설하여 포상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구매·기술협력이 온라인 네트워크로 확대·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노력하여 원가절감, 품질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그 성과는 합의에 따라 나누어 갖는 '성과공유제'가 확산되고 있다. 2004년 12월 개정된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처음 소개된 이래 포스코·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한 경영전략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 협력기업들의 취약한 교섭능력 보완을 목적으로 1982년부터 '수탁기업협의회' 제도가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대기업이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협력 사업을 주관하는 주체로서 새로운 차원의 '수탁기업협의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종전 1차 협력기업 외에 2차 협력기업도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DB 구축, 커뮤니티 조성 및 네트워크화 등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4. 대기업의 참여, 손목 비틀기로는 안 된다

산업연구원의 2005년도 상생협력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협력업체 지원계획이 과거에 비해 양적 또는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양적·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26%,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51%, '과거와 다름이 없다'가 23%로 나타났다.

상생협력정책의 장애와 갈등의 배경에는 행태중심적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정책이 행태중심의 규제와 지원을 앞세워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빈발했고, 이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누적되어 왔다. 상생협력정책은 행태 중심의 사고를 구조 중심의 사고로 바꾸었다. 증상을 치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인을 치료해가는 방식을 지향했다. 상생협력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틀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 요인을 극복해나가는 중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정부는 상생협력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문제를 일방적 구제의 논리가 아니라 수요자인 대기업과 공급사슬의 틀 속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를 찾아내고 이를 작동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생협력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상생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협력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2004년 9월 중소기업 혁신대전에서 대통령은 “앞선 기술이 넓은 시장을 창조한다”고 강조했다. 즉 핵심과제는 중소기업의 역량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인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높아지면 시장이 넓어지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상생협력의 기반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량 진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생협력의 컨텐츠는 중소기업제품의 수요자로서 대기업이 만족하도록 하는 인프라를 찾아가고자 했다. 중소기업 역량 진화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인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중소기업간 ‘역량 진화의 길’이다. 이와 같은 역량진화를 통한 각론 마련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대기업의 욕구와 안정적 시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욕구를 일치시킴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에 대한 기대목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정책 갈등의 또 다른 요인은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 대한 정부 개입에 대한 비판이다. 과연 정부의 개입이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의 손목을 비틀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깔려 있으며, 이는 대기업이 교섭력 우위에 기반한 유리한 거래관행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기업의 발전단계는 의존단계, 독립단계, 상호의존단계를 거친다. 기업의 생존전략도 기업의 발전단계에 대응하여 의존과 지원의 단계, 독자 생존능력 확보의 단계, 상생협력의 단계를 차례로 겪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도 기업생태계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발전단계에 걸맞은 상생협력전략의 부재로 인해 가치사슬상 기업생태계의 고리가 희미해진 결과이기도 하다. 상생협력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과 경쟁력의 양극화 문제를 단기적·일방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상대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기업생태계 차원에서 문제해결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상생협력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불신도 정책갈등의 요인 중 하나이다. 상생협력은 참여정부의 정책이므로 다음 정부에서는 없어질 정책이 아닐까 하는 우려이다. 정책이 단기간 추진되다 끝날 것이며 몇년만 조용히 지내면 그만이라고 하는 보신주의도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를 정권적 차원이 아닌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우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06. 3. 3)”을 제정했으며, 2006년 6월에는 산자부 내에 상생협력팀을 설치함으로써 상생협력정책을 정권적 차원이 아닌 정부의 지속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책의 구체적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대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업체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상생협력정책의 추진 결과 10대그룹의 상생협력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05년 현재 10대 그룹 274개 계열사가 거래하는 중소기업 수는 88,854개인데, 2005년 10대 그룹의 상생경영을 위한 투자는 8,318억원으로 전년대비 30.5% 증가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시장 확대→수익성 개선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10대 그룹의 중소기업에의 상생 협력 투자】

구 분		2004년	2005년	전년대비 증가율	
상 생 협 력	투 자 총 액	6,287억 원	8,138억 원	30.5%	
	유 형	기술·인력	3,124억 원	4,018억 원	28.6%
		경 영 자 금	3,073억 원	4,091억 원	29.4%
		정보화·마케팅	121억 원	208억 원	71.9%
중소기업 구매		63조 8,319억원	70조 8,519억원	11%	

\* 자료 : 산업자원부

또한 상생경영이 확산되고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늘었다. 공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포스코, 한국전력,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에서 상생경영을 경영모토로 도입하고, 성과공유제 도입 확산,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의사소통채널을 마련하여 공급사슬 전체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룹차원에서 삼성은 '상생과 나눔의 경영', 현대자동차는 '상생투명경영', LG는 '정도경영', SK는 '행복동반자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상생경영을 경영모토로 선언하고 계열사에 전파하고 있다. 한편 대기업들이 구조조정본부를 중심으로 주요 계열사에 전담조직 설치 등 상생경영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상생협력 전담조직으로는 포스코 중소기업상담센터, 한전 중소기업기술상담센터, LG텔레콤 PRM팀, 삼성SDI 협력회사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계열사 상생추진조직으로는 SK Business Relations 임원회의, 포스코 계열사 상생협력위원회, 현대차그룹 상생협력추진위원회 등이 있다.

그러나 정책 추진의 방향 및 중점이 불분명했던 점이나 정부 중심의 상생협력 추진방식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다. 상생협력의 관건은 대기업의 철학을 바꾸는데 있다. 대기업에게 상생협력의 중요성과 협조를 요청하는 것 외에 왜 상생협력이 대기업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관한 논의와 토론이 부족했다. 이러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률 격차를 강자인 대기업의 힘과 약자인 중소기업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파이 나누기'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그러면 상생협력정책은 공정거래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따라서 이 정책은 정책적 힘과 의지가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면 급속히 무력화되어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

또한 상생협력을 추진한 초기단계에서 중소기업의 낮은 수익률의 원인을 대기업의 과도한 힘의 행사로 규정하면서 대기업들은 상생협력을 정부의 힘에 의한 일종의 대기업 손목 비틀기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대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했다. 대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적이고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공론화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5. 시작은 정책으로, 마무리는 기업문화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를 위한 상생협력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상생협력은 새로운 지평을 향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하는 여행이다. 오랜 기업관행과 인식을 바꾸는 정책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상생협력정책은 시장친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희생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효율 창출을 통해 선순환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생협력정책의 출발은 양극화 해소라는 당위에서 비롯되었지만,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추진하여야만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높아지고 시장도 넓어지는 사례가 많이 축적되어야 한다. 상생협력을 통한 성공모델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생협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이끄는 요체라는 인식과 믿음이 상생협력의 추진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생협력을 정책이 아닌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관계를 공정거래법상 규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발적 상생협력이 중요하다. 시장 여건과 기업 인식이 미흡한 현실에서 초기단계는 정책이 견인하지만, 결국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장기적인 기업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논의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과학적 접근은 대·중소기업 협력과 진화의 알고리즘을 발견하고, 시스템화하고, 산업화하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자인 대기업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가는 기업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문화로 발전될 수 있다.

## 제 7 장 단계별 ·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 1. 소상공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소상공인이란 자영업자와 유사한 개념이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식당, 슈퍼마켓, 이발소, 미장원, 세탁소 같은 곳의 주인들이 바로 소상공인이다. (2000년 제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상공인을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로 정의했다. 자영업자란 자기 혼자 기업을 경영하는 자와 유급 종사자나 무급 가족종사자를 거느린 사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상 소상공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인다). 이들은 전체 취업자 10명 가운데 3명에 육박하는, 국민경제의 기초이다. 특히 저학력자, 여성, 고령자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싹틔줄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임금 근로부문으로부터 방출된 인력의 다수가 자영업자 부문으로 신규 진입함에 따라 외국에 비하여 그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 주요국 자영업자 비중(2004년, %) 〉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호주	이태리	한국	멕시코	OECD평균
7.4	9.2	10.4	10.8	12.7	13.5	25.5	<b>27.1</b>	29.6	<b>14.4</b>

※ 자료: OECD, 「OECD in figures」,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 국내 자영업자 비중 추이 〉

구분(천명, %)	1997	2000	2003	2006
전체 취업자	21,214	21,156	22,139	23,151
자영업자	5,901	5,865	6,042	6,135
비중	<b>27.8</b>	<b>27.7</b>	<b>27.3</b>	<b>26.5</b>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자영업자 : 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물론, 나라마다 경제사회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비중을 단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268만개나 되고, 종사자 수는 521만명에 이르고 있다. 전체 사업체 수의 89%, 전체 종사자의 43%를 차지하는 수치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치의 2배가 넘는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들의 소규모 창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 결과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자영업주가 연평균 144,000명씩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나치게 많은 소상공인이 서로 과당경쟁을 하게 된다. 2006년 현재 전국에 소매점과 음식점이 각각 60만 개를 넘는다. 대략 국민 80명당 한 집꼴이니, 20가구가 소매점과 음식점 한 곳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연 수익을 내기 어려우니 경영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유통업에 종사하는 영세 소매상들에게 대형 유통점과 홈쇼핑 등 새로운 업태의 출현과 확산은 늘 위협요인으로 작용해왔다. 200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여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소득증가율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고 신용불량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애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중요한 사회적 정책의제의 하나로 대두하게 되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은 제조업 대 서비스업, IT 대 비IT, 대기업 대 중소기업, 수출기업 대 내수기업 등 산업·기업간 소득·고용의 양극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 고용자로의 전환 등 고용구조가 악화되는 한편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생계형 자영업자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은 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력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2년 이후 소비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서비스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음식숙

박업, 소매업이 다수인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었으며, 자영업자 문제는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잠재되어 있었다.

2004년 11월 전국의 3만여 음식점 주인들이 '음식업을 긴급 재난업종으로 선포하라'며,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솔단지 시위'를 벌이는 진풍경까지 연출된 것은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는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전체 중소기업수의 90%에 이르는 자영업자는 과잉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 업태의 복잡·다양성, 대형 유통점으로 대변되는 신업태 증가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근원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은 경기만 좋아지면 자영업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산업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자영업 증가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직업전환이 가능한 자영업자와 가능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 사각지대를 줄여라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중소기업청이 1999년 2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부터이다. 당시만 해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대량실업 문제를 자영업 창업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성격이 강했다. 생업수단으로 자영업을 택하는 소상공인이 크게 늘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취약한 신용상태를 보완하거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조치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단기적 효과를 노린 대책들 외에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나 구조조정 지원 등과 같은 근본적 처방은 아직 담겨지지 않았다.

2002년부터는 수출과 대기업이 호황인데도 내수가 회복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가 더욱 커졌다. 특히, 국민의 정부 시절 무차별적으로 보급된 신용카드는

40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 그 속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포함되었음은 물론이다.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창업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소상공인의 경영이 악화일로를 걷게 되면서 이 부문의 난제들이 참여정부로 고스란히 넘어오게 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월 연두기자회견과 1월 17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 때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제시하면서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경계선상에 있는 공급과잉 및 취약업종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등 대책 수립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졌다. 그러나 자영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두고 출발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자영업 부문은 대상이 너무 많고 다양하여 뚜렷한 해결책 마련도 쉽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더 큰 비효율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 부문을 방치할 경우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자영업 분야에 정부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 쪽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5년 2월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총괄을 맡고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복지부, 노동부, 중기청 등이 참여하여 소관부처별 T/F를 구성 운영했다. 그리고 3~4월중 해당 부처별로 소관 업종에 대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실태분석을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완료하여 대책(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업종별 대책(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최종 협의 및 보완을 통해 5월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 보고회의를 개최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일정중에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05. 3. 8)가 개최되어 상반기중 자영업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할 것을 재확인했고, 그 후에 국장급 회의, 관계 차관회의,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회의 등을 통해 대책 관련 세제, 소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부처 협의와 보고 내용에 대한 최종점검이 이루어



어졌다.

이 과정에서 5월 23일에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진입규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창업숙려제도의 개념하에서 창업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제공, 그리고 자금대출이 몇 단계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고 금융기관의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업계 실태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이와 같이 소관 업종에 대한 실태분석 및 의견수렴을 거쳐 5월 31일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하여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영세자영업자 대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부처간에 사안별로 이견이 있어서 협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대책(안)이 수정·보완되기도 했다. 특히 부처간 의견 대립이 심했던 분야는 영세 자영업의 경영 컨설팅 지원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영세자영업 대책의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는 의견을 보인 반면 관련부처인 예산처는 재원확보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반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산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사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부처간 협의 결과 우선 기존의 컨설팅 예산을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편성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청의 전국 상권정보 네트워크 구축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자율적인 진입방지를 위하여 가장 긴요한 사업으로서 재원투여에 비해 효과가 높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관련부처인 예산처는 민간부문 우선 활용이 타당하고 정부지원 효율성 문제로 인해 수용 곤란하지만, '06년 신규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 예산처는 '0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수용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노동부의 영세자영업자 재취업(Re-start) 훈련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퇴출 촉진대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06년부터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가능하며, '05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06년부터 실시할 경우 이번 대책의 효과성이 반감하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관련부처인 예산처는 기존 훈련 프로그램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협의를 통해 예산처는 당초의 입장을 바꾸어 추가 예산편성 시 수용하여 '05년 하반기부터 실시 가능하고 '06년부터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이 부처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출된 정책은 주요 현안이었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인 컨설팅, 상권정보 등과 같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인프라 지원 관련 대책이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영업 부문의 또 다른 주요 현안이었던 과잉화 해소를 위한 구조개선의 대표적인 대책인 재취업 훈련 대책도 마련되었다.

참여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정부개입 없이 시장경제에 맡겨 둬으로써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영세자영업자 부문에 대하여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6개 부처가 참여하여 종합대책과 업종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추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즉, 참여정부는 과거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영세자영업자 문제도 이러한 틀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동반성장 전략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모든 계층의 시장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생산능력 극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사회정책을 성장전략의 하나로 간주하여 경제정책과 통합·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은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운 시대이므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패러다임이며, 복지를 성장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시혜적인 배분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산적인 참여복지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 3. 건전한 자영업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정부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측면에서 자영업자 스스로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여 적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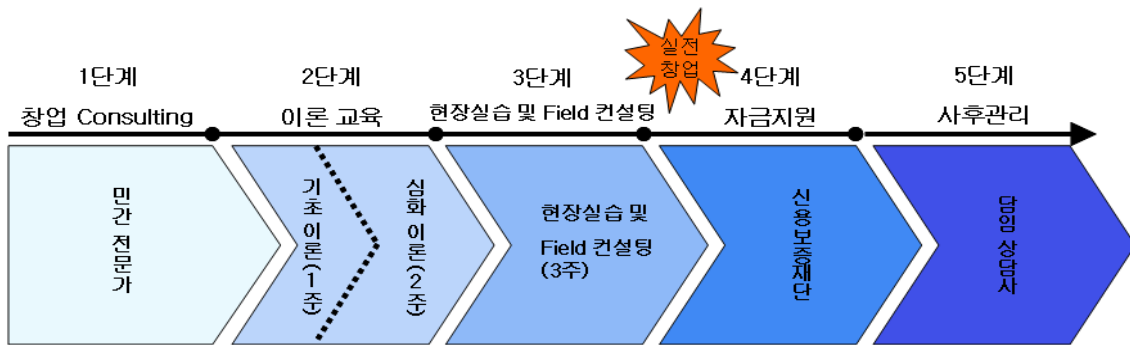
규모의 진입, 퇴출이 이루어지는 건전한 자영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과잉진입 예방, 경영안정 지원, 사업전환 및 퇴출 유도, 프랜차이즈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자영업 컨설팅 지원체제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실업대책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온라인상으로 사전에 창업성공가능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창업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하여 무분별한 창업을 예방하고, 재래시장과 상점가 등 전국 주요 밀집상권정보를 DB화한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지와 업종정보와 같은 정밀한 상권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예비창업자들이 교육을 마치고 사업성을 검토하여 창업을 하도록 창업컨설팅,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 자금지원, 사후관리를 연계하는 5단계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 프로그램 흐름도 〉



※ 자료: 중소기업청

또한 지역중심의 컨설팅·교육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경영안정, 사업전환 및 퇴출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했다. 2007년까지 점포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지역별 자영업자 컨설팅본부'를 설치하여 상담사와 전문 컨설턴트가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창업률을 높이기 위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 정책은 창업주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번창하는 사업을 통해 자영업체 근로자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 특히 대기업이나 중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미숙련·저학력 근로자나 실직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 내에 있도록 함으로써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나아가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약화, 산업구조의 변화 및 경기변동성의 증가로 인한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점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세자영업 정책이 갖는 의미가 크다.

#### 4. 자영업자 대책, 의도는 좋았으나...

영세자영업자 대책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6개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창업 유도를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 및 한계 자영업자의 원활한 구조조정이라는 정책의도와는 달리 언론을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내용이 빠져있는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대책”,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대책의 세부과제 중에서 세탁업, 제과업 및 미용업의 준비된 창업 유도 및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방안에 대하여 언론과 이해관계자들의 집중적인 비판이 이루어졌다. 일부 언론은 대책의 정책방향과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자격증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부각시켰다. 또한, 기존의 사업자들은 기득권 침해 우려 때문에 그리고 예비창업자들은 시장진입에 애로를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언론을 중심으로 대책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정부는 2005년 6월 6일에 개최된 당정협의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정책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일부 정책을 보완함과 아울러 지역별·업종별 경영실태 및 상권정보를 제공하고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대책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방안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자격증 도입이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거치고 내용을 보완하여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보완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로 대책 초기에 집중되었던 비판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그러들었다. 쟁점이 되었던 미용업, 세탁업 및 제과업의 자격증 제도와 관련하여 자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 자격증을 보유하면 창업이 가능하고, 기존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변화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마치 모든 자영업 대책이 철회되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등 비판적인 시각을 여전히 견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대국민 홍보로 점차 분위기가 반전되어 자영업 컨설팅 개시 홍보('05. 8. 1) 이후에는 부정적 입장이었던 언론까지도 호의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정책의 수립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대책의 전체적인 방향은 맞았지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제과업·세탁업 등에 대한 자격제 제한 때문에 정책 전체가 몰매를 맞고 말았는데, 자격제한 관련 정책은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예비창업자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사실이 크게 부각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만 것이다. 즉, 정책의 변지수가 잘못됨으로써 일어난 일인 것이다.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여론의 수렴 및 토의절차와 수요자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 5.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

2003년 6월 중소기업청은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정책 개편방안' 회의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 이라고 보고하고 인수·인계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들은 소속변동에 따른 신분불안과 중앙정부

가 소상공인지원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센터 운영권의 시·도 위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도 시·도 위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2004년 3월 관련 전문가 13인으로 Task Force를 긴급 구성하여 재검토한 결과 지방위임은 타당하지만 지자체의 인수준비 기간, 예산확보 등을 위해 그 시기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토대로 국회, 관련부처, 업계 등과 협의를 진행하여 위임 시기를 당초 2004년 7월에서 2006년 1월로 연기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상담사 워크숍 등 적극적인 설득작업과 고용승계 준비, 업무매뉴얼 작성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마침내 2006년 1월 소상공인지원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었고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 협조체제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 아무리 타당한 정책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겼다.

## 6. 이제 걸음마, 그러나 꾸준히

참여정부의 자영업 지원정책은 과거와 달리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직자들의 소규모 창업을 적극 지원하던 것과 달리, 이보다 진일보하여 준비된 창업을 통한 자영업의 자생력을 길러줌으로써 양질의 고용환경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향후 정부의 정책은 멀리 보는 안목으로 각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잉여인력이 원활하게 타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흡수력이 높은 산업은 역시 서비스업이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냈었던 데에는 역시 제조업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특히 서비스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는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전체의 고용여건 개선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2006년 1월부터 현장 밀착형 지원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각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업무연계를 통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운영단계에 접어들어야 한다.

자금지원 측면에서는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금에 있어 선택과 집종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보증지원 업무도 사업타당성 평가, 적절한 심사체제 구축 등을 통해 선별적인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실패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공제제도의 확산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제 확산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업종전환이나 전직을 지원하여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 제8장 서서히 열매맺는 최초의 재래시장 정책

### 1. 재래시장, 우리도 할 수 있다

한우로 유명한 강원도 횡성군의 횡성시장. 구성진 강원도 사투리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곳은 120여 년의 오랜 역사가 있는 시장이다. 원래 영서지역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었지만 예외 없이 들이닥친 현대화의 물결 때문에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지방시장에서 우리나라 재래시장 활성화의 불씨를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상인들 스스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시작한 재래시장 살리기 성공사례가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2004년 3월 5일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재래시장 혁신사례 보고대회가 개최되었다. 시장상인들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책을 보고 받고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한 것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보고된 사례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강원도 횡성군의 횡성시장이었다. 상인들 스스로 8억원의 자금을 모으고 중소기업청과 강원도에서 19억원을 지원받아 상가 건물을 새로 고치고 통로를 정비하면서 영업방식을 개선한 결과 매출이 25퍼센트 이상 증가되었다는 것이었다.

대회에 참석한 횡성시장 장태종 조합장은 “우선 빈 점포가 없어지고 시장에 활기가 넘쳤다”며 “매출이 오르면 시장 전체가 싱싱한 상품,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시장 상황을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래시장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성과를 평가해서 효과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사업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때부터 재래시장 지원정책에 큰 변화가 생겼다. 2003년 833억원이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예산이 2004년에는 추경예산 450억원을 포함해 165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눈이나 비가와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아케이드 설치, 차량 이용 고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 낡고 불편한 화장실 개선, 늘 질퍽거리던 시장바닥 포장공사... 시장 골목마다 고치고, 바꾸고, 뜯어내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도 재래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제정에 착수했다. 여야 모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17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법률제정을 위한 입법 수요조사에 착수하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오영식 의원이 중심이 되어 재래시장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실태 파악과 법률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매주 회의를 열고 입법 방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에서는 이 두 법률안을 합해서 그해 10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2005년 3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법이 시행되자 재래시장 지원은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 등록시장뿐만 아니라 미등록시장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고, 낡은 시설을 고치고, 영업기법을 개선하는 현대화사업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노후한 곳은 재개발·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의 특례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는 특별조치가 취해졌다.

## 2. 재래시장을 부활시켜라

참여정부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까지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유통시장을 개방하면서 대형마트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여 당시 34개이던 대형마트는 2003년에는 238개로 7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편의점 등의 출현으로 유통산업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 고객이 떠나는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개입의 범위, 수준, 지원효과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교환과 진지한 논의를 수차 거듭한 결과, 투입대비 산출이라는 경제성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은 비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입장과, 유통환경 변화로 구조적인 경쟁력 취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시장상인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입장이 있었다.

정부는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결론은 재래

시장에 대한 지원은 하되 경쟁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거나 정부가 지원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상인 스스로 혁신을 통해 새롭게 변하려고 노력하는 곳을 우선 지원하여 정책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시장경쟁력이 취약한 곳은 시설투자를 줄이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하여 현대식 시장이나 유통공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토록 했다. 이러한 경쟁력 수준별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1,600여개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경쟁력 평가를 실시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공감대를 얻어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과 예산편성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적극 지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에는 재래시장을 체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2005년 1월 재래시장지원과를 설치하고, 3월에는 종합지원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남대문시장 인근에 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시장활성화의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2006년 5월에는 전국 재래시장상인들의 구심점이 되는 전국상인연합회를 설립했다. 지방자치단체와는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추진기법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열어가면서 초기의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이로써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시장경영지원센터, 전국상인연합회의 4개 지원축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시장마다 고쳐야 할 시설을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는 전문가를 시장에 파견하여 현대식 마케팅 기법을 제공하며, 시장상인회에서는 상인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거두었다. 정부와 시장상인이 한마음으로 뛰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재래시장의 특성과 경쟁력 수준에 따라 전국 상권의 대형시장은 광역형 및 글로벌 시장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회복 가능 시장은 지역 특화시장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경쟁력 상실시장은 새로운 유통공간으로 전환시키거나 용도를 전환하는 육성전략을 마련했다. 둘째, 선진국의 지역상권 개발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상권 개발제도를 도입, 재래시장과 인접상권을 묶어 대형상권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셋째, 재개발사업과 도시계획 변경절차 통합, 16개 인허가 사항 일괄 처리, 국공유지 수익매각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재

개발·재건축을 촉진하도록 했다. 넷째,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확보 등 시장현대화 사업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05년 : 1,068억원 → '06년 : 1,228억원)하여 편리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광역형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등 공동사업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지역관광지를 활용한 관광상품(예, 재래시장 Love Tour)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 다섯째,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지원본부와 시장지원팀을 신설하고,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재래시장상인연합회 구성 등 상인들의 조직화도 적극 추진했다.

재래시장은 이제 단순히 예전부터 있어왔던 재래시장(在來市場)이 아닌, 고객이 다시 찾아오는 재래시장(再來市場), 상인들이 돈을 버는 재래시장(財來市場)으로 변신해야 한다. 재래시장의 부활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부흥의 키포인트이다. 좋은 상품, 좋은 서비스, 좋은 거래가 사회를 밝히고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 3. 어, 재래시장이 달라졌다!

재래시장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다는 말은 옛날 이야기이다. 이제 시장마다 현대식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사시사철 편하게 쇼핑할 수 있고, 넓은 주차장에 쇼핑카트까지 갖춘 곳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시장의 3분의 1에 가까운 555개 시장의 891개 시설을 고치는 데 4948억원을 지원했다. 333개의 아케이드, 주차장 147개, 건물 개량 286개 등의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 재래시장 지원실적 〉

구 분	'02	'03	'04	'05	'06	계
시 장 수(건)	75	182	263	169	201	890
금액(억원)	227	816	1,608	1,068	1,228	4,948
평균금액(억원)	3.0	4.5	6.1	6.3	6.1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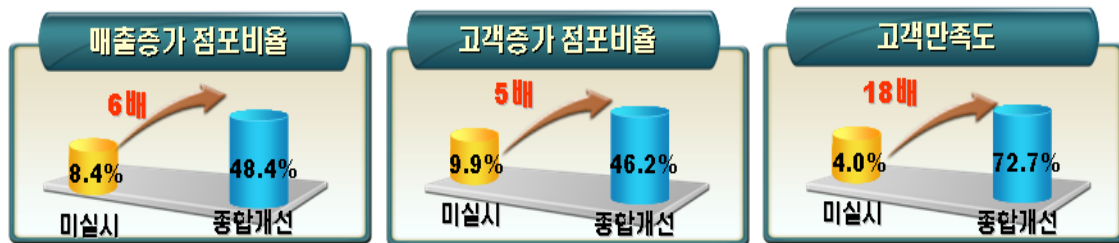
※ 자료 : 중소기업청

상인들의 영업기법도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가고 있다. 2005년부터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시장과 상인의 경영혁신에 본격 착수하면서부터이다. 때

년 상인 1만 명을 교육하고, 31곳의 대형 시장에는 상인대학을 설치하여 8~15주간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300개 시장에서는 정부지원으로 할인 행사를 열었고, 고객에게는 포인트 쿠폰을 나누어주고 있다. 전문가들이 시장을 찾아다니며 매력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점포별로는 점포관리기법을 지도한다. 서울 방학동 도깨비시장, 수원 지동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앞서가는 시장에서는 빈 점포가 사라지고 매출이 20퍼센트 이상 늘어나면서 지원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재래시장 빈 점포율은 17.7퍼센트에서 2005년 13.2퍼센트로 낮아져서 1만4000명의 상인이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1월에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시설 종합개선 시장(28개), 부분개선 시장(161개), 시설개선을 안 한 시장(44개)의 상인 8,219명, 고객 7,094명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 결과, 시설 종합개선 시장과 하지 않은 시장 간에는 매출·고객증가 효과 등 영업실적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종합개선한 시장은 안 한 시장에 비해 매출증가 점포가 6배, 고객증가 점포는 5배에 달했다.

【재래시장지원의 정책효과】



자료 :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설을 종합개선한 시장은 평균 매출이 7.6% 증가한 반면, 시설개선을 안 한 시장은 평균 매출이 15.3%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간 정부의 지원을 받은 555개 시장의 매출감소 방지효과는 연간 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 555개 시장 추정 매출액( '05년) : 109,335억원
- 555개 시장 매출감소 방지액 : 10,496억원(109,335억원 × 9.6%)
  - 감소방지율 : 9.6%(미개선시장 감소율 15.3% - 평균매출 감소율 5.7%)

이제 상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성공한 시장의 비결을 배우러 견학을 다니고 있다. 어느 신문기자는 이를 두고 '환갑 지난 재래시장에 회춘 바람이 분다'라는 기사를 썼다. 고목도 잘 가꾸면 꽃이 핀다는 것을 재래시장 정책이 보여주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품질과 가격으로 지역 중소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을 위협해도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재래시장의 정서와 향수를 바꿀 수는 없다. 시장 내의 기본시설 개선과 상인들의 의식개혁, 앞서가는 경영기법과 체질화된 친절서비스의 생활화가 실현되면 재래시장도 충분히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을 유치하는 선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효과적인 시장운영의 열쇠인 시장상인 스스로의 자각과 반성, 고객지향적 상품, 서비스, 판촉기법등의 현대화와 과학화가 추진되면 어떤 유통업체보다 강한 정서적 기반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4. 다시 찾는 재래시장으로

2006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특색있는 시장을 만들고 성공모델을 창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제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재래시장을 살리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유통산업의 변화와 발전 속에 어차피 축소, 소멸되어가고 쇠퇴하는 재래시장을 왜 붙들고 야단이나는 시각도 있다. 특히 지역경제 주체로서 서민경제의 현상이며 시장운영의 주체인 상인들이 스스로의 각오와 재기의 노력이 부족한데 국가적 지원이 왜 필요하냐는 주장이 있지만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서민의 풀뿌리 경제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2006년 5월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고객이 즐겨 찾고 활력이 넘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과 점포의 경영혁신, 시장관리 선진화, 시설개선, 매력 있는 지역상권 만들기의 4대 과제에 3년간 4678억원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우리 시장의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2005년 전국 재래시장의 경쟁력과 실태조사를 마치고 1660개 시장에 대한 입지여건, 시설수준, 경영능력, 상인조직의 경쟁력을 반영한 성적표를 만들었다.

재래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모든 시장을 다 살리는 것은 큰 무리이다. 경쟁력 있는 시장을 평가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효과와 효율을 추진해야 한다.

환자의 병을 고치려면 진찰이 정확해야 하듯이, 시장을 살리려면 시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년에는 더 나아가 각 시장의 고객 특성, 주변 인구의 특성, 교통여건 등 상권을 분석하고 있다. 이 재래시장 성적표는 각 지자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쟁력과 상권 특성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시장의 경쟁력과 특성보다는 시설개선 위주로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상권 경쟁력 평가결과를 토대로 취약요인을 찾아 필요한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시장별로 특성을 살려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설현대화를 지원할 때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 컨설팅과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시설투자를 방지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의 도시개발모델 발굴, 지역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중소도시 재래시장의 재활용, 소비자의 소득수준에 부응하는 유통공간 개발, 정보화시대에 맞는 영업기법 개발과 현대식 상권을 개발하고 관리를 맡아주는 전문기관의 설립과 노점상에 대한 안정적 영업공간 제공 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황성시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래시장의 성패는 그 주역인 시장상인들에 달려 있다. 정부는 지역경제의 실패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지원하고 있는

나 재원에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지나친 지원은 자칫 재래시장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시장상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앞장 서서 변화한다면 우리의 재래시장에는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 5. 역시, 스스로 변하는 자가 성공한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시장상인이나 전문가, 공무원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있다. 바로 '상인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인이 변해야 재래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교훈은 이미 우리나라 시장이나 일본 재래시장의 성공사례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결국 재래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상인 자신들의 문제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 구성원의 조직화'는 중요한 기반조성사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주체가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고 단합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주변의 많은 시장 활성화 사례에서 보듯 추진 주체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면 시작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상인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상인들은 통상 생업 위주로 점포를 운영하다 보니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공동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부산의 한 재래시장 번영회 관계자는 "시장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점포 구성을 고민했으나 개별 점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면서 "상인들 중에는 자기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한국유통과학연구소 박승제 대표연구원은 "활성화를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개별점포의 이익 집착에서 벗어나 전체 시장이 살아야 개별점포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충고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상인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한 공정무사한 리더도 필요하다. 서울의 우림시장 등 국내외의 성공사례에서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재래시장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최근 부산진시장 점포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시킬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별로 승계시킬 마음이 없다'가 43.7%, '절대 승계시키지 않을 것이다'가 31.6%로 나와 시장상인 4명 가운데 3명꼴로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이는 자기 직업에 대한 자신 부족이며 패배의식이다. 이제 이러한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상인으로서의 자부심, '사농공상'의 의식에서 '상공농사'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바뀌면 불친절이나 가격표시제·원산지 표시 미이행, 카드 사용 거부 등의 구태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상인들의 의식전환은 재래시장 활성화 성공여부의 열쇠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인이 유통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마인드를 토대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력 향상의 주체로서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경쟁력 향상 전략이 효과를 볼 수 있다. 결국 재래시장 활성화는 시장상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 제 4 부 정책수요자를 배려하는 현장행정 구현

### 제9장 고객만족을 위한 정책정보 전달체계 혁신

#### 1. 정책은 홍수인데, 중소기업은 목이 마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만들어내는 각종 정책정보의 활용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공공기관,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정보는 모든 중소기업이 활용해야 할 가치 있는 자원이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바쁜 중소기업인들은 정작 필요한 정책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여 활용할지를 잘 모르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많은데 정작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듣게 되는 하소연의 단골메뉴 가운데 하나였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부의 지원정책을 쉽게 파악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인원과 조직이 작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부처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정책은 단순하고 효과가 크면서도 이용하는 데 비용이나 시간소요가 많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정책은 그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개별정책 또한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최준영 전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 참새가 비록 작아도 오장육부가 다 있는 것처럼 기업을 영위하는데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그 경영활동 내용이 대기업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즉,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업무단계(value chain)는 유사하지요. 따라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업무단계별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창업, 기술, 자금, 인력, 판로, 수출,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시책에 따라 정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둘째, 창업, 성장, 성숙, 구조조정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이 다르고, 지원

해야 할 기업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부처가 직접 정책을 집행할 수 없어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관, 생산기술연구원, 산업인력공단 등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이 설립, 운영되면서 정책서비스는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셋째, 예산과 인력 등 한정된 자원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보니 정책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제지원도 꼭 필요한 기업에, 그것도 필요한 분야에 국한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제도의 세분화가 불가피한 것이지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많지만, 창업지원법상 창업이나 아니냐에 대한 유권해석도 수십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남의 공장을 인수하여 새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업승계로 판정받아 엄청난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력과 조직이 작은 중소기업을 위해 알기 쉽고 접근이 용이해야 할 지원제도는 오히려 그 작은 규모 때문에 역설적으로 복잡, 다양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되도록 많은 정책을 펼쳐놓고 적합한 중소기업이 이용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만 200여 개에 달하고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만도 7000개가 넘는다.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수백 개 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검색해서 수천 개에 이르는 정책정보 가운데 자기들 기업에 맞는 지원제도를 취사선택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여간한 인내 없이는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일이다.

인쇄매체나 순회정책설명회 등을 통한 오프라인 방식 역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전달에 불과하다. 게다가 준비와 시행에 3~6개월의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달되는 시점에서는 정보의 시의성이 저하되어 실질적인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참여정부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대통령의 지시내용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수요자가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정보 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공급자 편의성이 정책 효과를 저해하고,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정책 수용성 및 참여도를 떨어뜨린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책정보 전달체계의 혁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혁신의 목표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정책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정책효과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데에 있다. 정책정보 전달체계의 혁신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정책정보를 전달하는 인력과 조직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2.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책정보 전달체계의 혁신은 대통령이 “중소기업정책내용을 깔끔히 정리하여 전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알려주고 정책을 예고해주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04. 12. 13 수석보좌관회의)” 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참여정부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경제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며 이는 경기회복 지연과 함께 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데에도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는 2005년부터 산업정책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고객지향형 정책서비스에 관한 혁신동아리를 운영해왔다. 혁신동아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각 부처와 기관별로 구축된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정책정보 접근을 시도해보았다. 기관별로 구축된 홈페이지는 통합적인 안내나 검색이 불가능하여 지원기관을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미로찾기식 경로탐색부터가 어려운 일이었다. 정보를 찾아내더라도 제공내용이 단편적이어서 원하는 세부내용을 찾기는 더욱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정책정보의 통합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수립되었다.

“중소기업정책정보 전달체계 혁신방안”은 일상업무 속에서 추상적 지시와 지침

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혁신을 해나가는 좋은 사례이며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정보) 서비스의 모범사례”(노무현 대통령, '05. 9. 21,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로 평가되었다.

중소기업정책정보 전달체계의 혁신방안이 수립된 2005년 9월부터 10개 부처, 15개 유관기관이 6개 실무위를 구성하여 총 10차례의 회의와 민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불과 3개월 남짓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6년 1월 초부터 온라인 상에서 중소기업정책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SPi 시스템(www.spi.go.kr)이 시범가동에 들어가게 되었다(SP이 빠르고(Speedy), 정확한(Precise), 정보(Information)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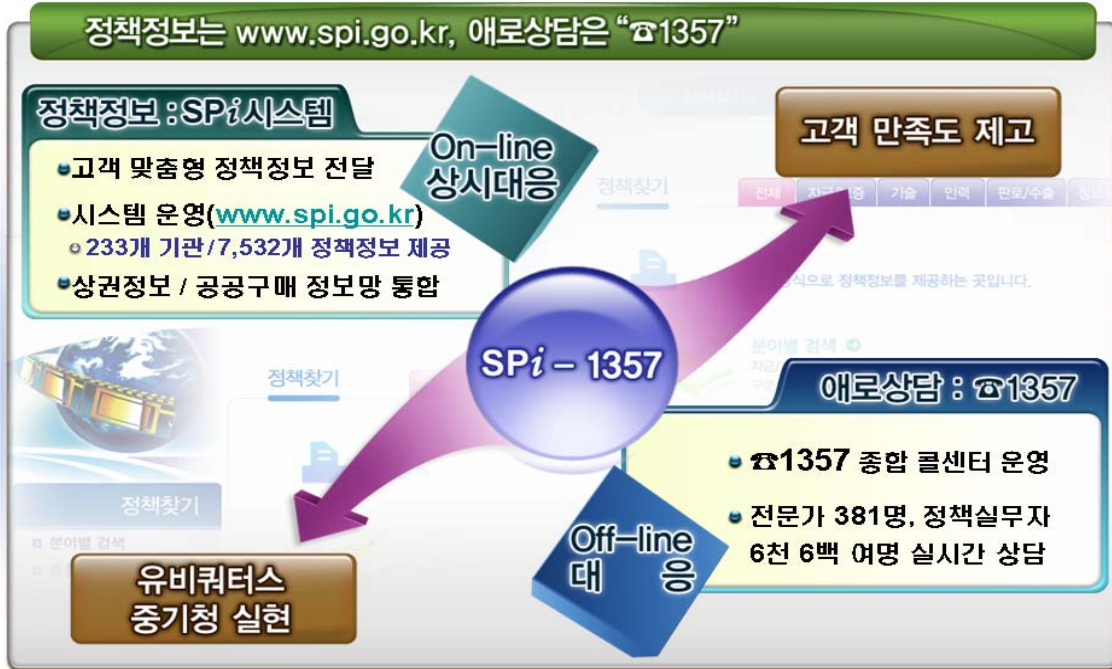
2005년에 실시된 중소기업의 정보 획득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쇄매체보다는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은 정보활용 시에 정책정보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첫번째 애로요인으로 꼽았다(정책정보 취득방법은 인터넷이 72%였고, 정보 획득 과정의 애로요인은 검색과정이 복잡하고(45%), 내용 이해가 어렵고(22%), 정보가 부실하다는(19%) 것이었다). 아울러 획득한 정책정보에 대한 추가문의나 구체적인 애로사항의 해결과정에서 온라인보다는 일반전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재래시장상인 등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더 익숙한 정책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생겼다. 전화 한 통화로 정책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일시에 풀어줄 수 있는 ‘☎1357 중소기업 종합상담센터’가 개설된 데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1357 콜센터’에는 74개 기관의 실무자 666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개설 후 6개월 동안 총 3만여 명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하여 처리해왔다. 특히 상담이 끝난 직후 실시간으로 ARS 고객만족도를 조사,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SPi시스템과 연계한 정책안내 및 상담서비스를 추가하여 질 높은 One-Call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357 콜센터에 대한 업체들의

감사편지가 속속 답지하고 있다.

【SPi-1357 시스템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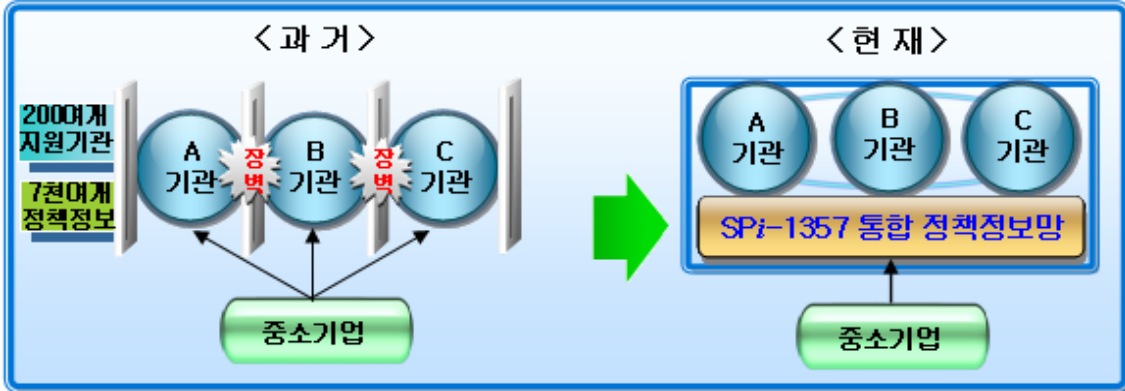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정책정보 전달체계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속·정확한 정책정보의 갱신, 다양한 중소기업 니즈의 파악 및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첫째, 중소기업정책 관련 DB의 특징인 집중성과 현재성 중 집중성은 일정 수준 달성할 수 있었으나, 현재성을 확보하는 데는 유관 기관들의 협조 미흡으로 필요한 정보가 신속히 업데이트 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 초기에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심으로 10개 부처, 15개 유관기관의 6개 실무팀 80여 명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정책정보추진반을 구성하여, 총 10차례 회의 및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와 시스템 설계 및 DB 작업도 했다. 그러나 SPi 시스템 구축 후, 정책정보의 갱신 등에 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시범운영 기간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매일 신규 정보를 찾아 등록하는 등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다시 제기되었다. 정책정보의 갱신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회의 보고와 각 부처의 협조를 거쳐 관계기관 워크숍을 통해 각 부처·청 및 시도 책

임하에 신규정보를 입력·관리하는 정보관리책임제를 도입하여 해결했다.

【SPi-1357시스템의 발전】



자료 :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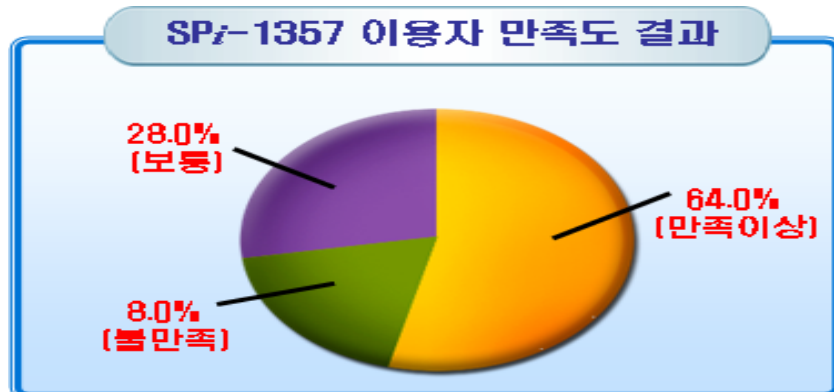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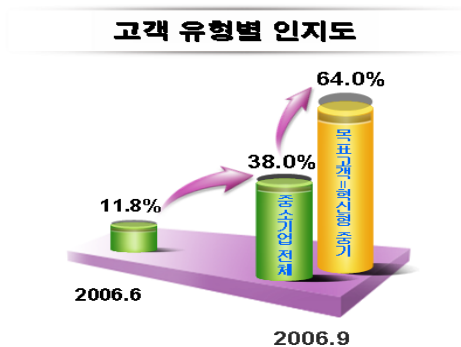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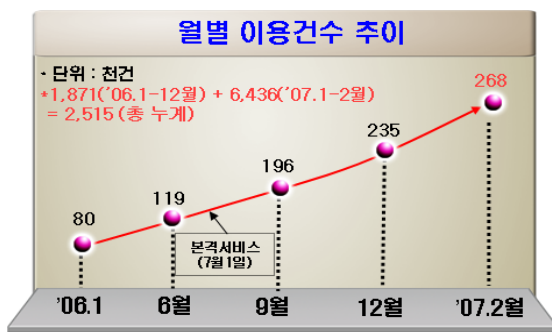
둘째, 중소기업의 특성상 업종·규모가 다양해 중소기업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시스템 구축 이전에 수요조사('05. 11)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중소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2%). 하지만 애로사항으로 '검색과정 복잡'(45%), '내용이해 곤란'(22%), '정보 부실'(19%) 등이 지적되어 초보자들도 마우스만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단순 검색기능을 통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고, 비정형 정책정보를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업개요·지원절차·신청방법 등으로 정형화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자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을 구성('05. 11. 24)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수렴했으며 이를 개발과정에 반영했다.

셋째, 우리나라는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이 보편화되었으나, 정보환경이 취약한 영세기업 등은 정책정보에 대한 추가상담이나 경영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전화 사용을 선호(60.8%)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등 74개 유관기관과 함께 6,668명의 상담인력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총 381명의 분야별 전문상담가를 투입하여 법률·회계·세무 등에 대한 무료 전화상담을 수행하는 전국단위 오프라인 종합상담 '1357 콜센터'를 구축했다. 또한, 온라인 정책포털인 SPi시스템과 오프라인 1357 콜

센터를 연계한 중소기업 도우미 SPi-1357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이 쉽게 기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SPi - 1357

중소기업정책전달시스템(SPi-1357)의 이용자 수는 매월 급증하고 있다. 서비스 초기 월평균 11만여건 접속(1일 평균 3천여건)이던 이용실적이 '07년 들어 월평균 30만여 건 접속(1일 평균 1천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용자 총누계가 252만건을 돌파했다. 서비스 개시 당시 고객유형별 인지도는 11.8%에 그쳤으나 이후 인지도가 중소기업 전체의 38%, 혁신형 중소기업의 64%에 이르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SPi-1357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64%가 만족 이상, 28%가 보통으로 나타났다.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들이 SPi-1357 성과를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일목요연한 정보제공, 개별 기업 방문 등 불편해소, 시기별 자료 제공으로 미리 대응' 순이었다. 이러한 SPi-1357 서비스 성과는 이용자의 감사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본격서비스 이

후 70통이 넘는 감사편지를 통해 ‘그 내용이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에 감사’하며,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



자료 : 중소기업청

2006년 8월에는 서비스의 독특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출원 2개월 만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같은 달 ‘APEC 중소기업정책실무자 회의’에서 21개 회원국들에 선보인 후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등에서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2006년 9월 말 베트남에서 열린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는 SPi-1357이 ‘국제적으로 본받아야 할 혁신정책’으로 선정되어 장관 공동선언문에 수록되기도 했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이 지적한 것처럼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 SPi-1357이 혁신사례로 반영된 것은 역내 국가를 선도해나가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정책의 위상을 높인 쾌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정책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관련부처간 협업 미흡, 콘텐츠 개선 확대 미흡, 온라인 지원 미흡, 온-오프라인 협력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관련부처간 협업이 여전히 요구된다. 기관별로 중소기업 관련 정보망을 다수 보유 및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3개 정보망만 연계 서비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망을 단순 링크하여 연계 서비스함에 따라 SPi와 해당 정보망간 정보공유가 미흡하다. 또한 중소기업이 정보망 이용시 중소기업 현황DB, 공공구매정보망, 상권정보시스템 등 연계 정보망의 각 망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고 매번 로그인해



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소기업 관련 정보망에 대한 통합 안내 서비스 및 연계 정보망에 대한 정보공유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콘텐츠를 개선 확대하고 검색 기능 강화로 맞춤형서비스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창업준비, 창업, 성장 등 성장단계와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등의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구현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정보 총 1,528건 중 약 30%미만인 450개 사업만이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등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기관 위주의 복잡한 온라인화 절차로 중소기업이 온라인 사업신청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즉, 수요자 중심으로 온라인 민원 절차를 개선하고, 온라인화가 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온라인화 대행처리가 필요하다.

넷째, 온-오프라인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1357 서비스 제공도 좋지만 이는 오히려 오프라인 의존도를 높여 온라인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SPi시스템의 온라인 상담실과 1357콜센터의 오프라인 상담실간 상호연계 협력체제 강화도 절실하다. SPi 브랜드화에 대한 온라인 홍보강화 및 온-오프라인 연계 상담 체제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네이버, 다음, 야후 등 검색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홍보 뿐만 아니라 지하철광고, 생활정보지, 지하철 무가지 광고, 옥외 전광판, 홍보용 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도 가능할 것이다.

#### 4. 유비쿼터스 정보전달체계를 향하여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정부가 바뀌고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이 수립되었지만, 정작 지원을 받는 고객들에게 정책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데 들이는 노력은 많았지만, 생성된 각종 정책정보가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게 된다.

정부의 정책도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파는 일종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인이 정성들여 만든 상품을 소비자에게 팔 듯, 정부도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정

책을 만들어 최일선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300만 중소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중소기업정책정보를 활용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SPi-1357'은 이러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산물이다. 이제 정책 전달의 효율성을 더욱더 보장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정책정보 전달체계 혁신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자의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정책의 품질을 향상하는 고도화 단계로 발돋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즉, 300만 중소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유비쿼터스화 하는 안정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이 결정적으로 요구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부처, 공기업 등을 망라한 '중소기업 CEO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수요자 의견수렴과 역할 분담 등 중소기업정책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구축된 정책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전달에서 정책 활용체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콘텐츠의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해 업데이트 주기 단축, 관련정보의 확보, 중소기업 정보망 연계 등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정책이 필요한 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관련 사업 및 민원 안내뿐만 아니라 사업 및 민원의 신청·진행·결과 등 일련의 프로세스를 전자문서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책정보의 품질관리(PLM)와 수요자의 특성 및 성장과정을 감안한 고객 이력관리를 추진하여 더욱 지능적인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관리(CRM) 기반의 지속적인 사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콘텐츠를 개선 보완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핸드폰 사용자임을 고려할 때, 현재 운영중인 On-Line(SP이시스템)과 Off-Line(1357시스템)의 정책정보전달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핸드폰을 통한 정책정보의 맞춤형 전달체계(모바일 정책정보전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최초 정책정보가 생성될 때 SMS기능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전달하고, Phone-Site를 통해 자금, 인력, 판로 등 각종 콘텐츠를 시간, 공간, 위치의 제약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제 5 부 ‘글로벌 강소기업’ 을 향하여

### 1. 중소기업의 비전2030

향후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변화는 갈수록 더 빨라질 것이다. 또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혁신에 대한 압력 또한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우리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은 과거 전통적인 역할 이외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산업 구조 전환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화에 기반한 경쟁을 확산시키며 고용을 창출해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자체역량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혁신활동을 추진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더불어 글로벌 시대에 맞게 대내외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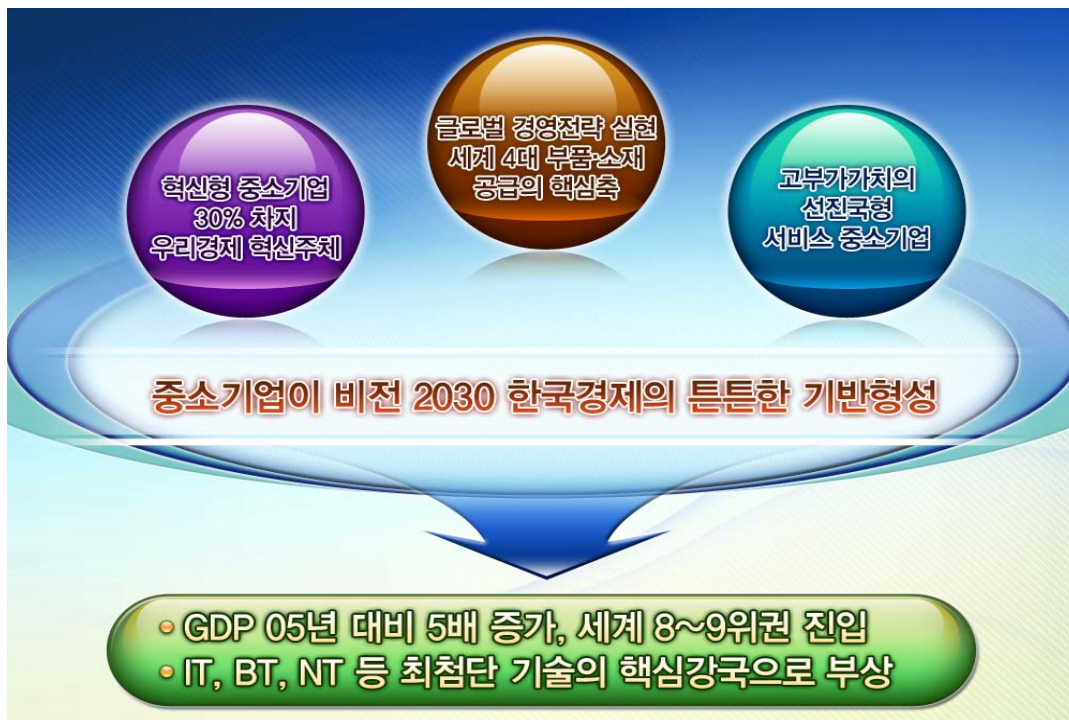
아울러 정부의 정책 또한 과거 저금리 등 값싼 요소비용에 의존한 저가경쟁시대에 형성된 틀을 과감히 탈피하고 혁신주도형 경제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창출·성장할 수 있는 개방적 시장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경쟁력 취약계층의 혁신역량을 제고하여 동등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 각 부문별 균형발전이 가능한 성장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노동 등 전통적 생산요소도 지식자산과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특성에 맞게 공급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영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중소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이 결합될 때 2030년 혁신형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을 제외한 전체 중소기업의 30%를 차지하여 우리 경제의 발전주체가 되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경영전략을 실현하여 세계 4대 부품·소재 공급의 핵심축이 되며, 서비스 중소기업도 고부가가치의 선진국형으로 발전되어, 중소기업이 비전2030 한국경제의 튼튼한 기반이 됨으로써, 2030년 우리나라가 GDP는 2005년 대비 5배 증가하여 세계 8~9위권으로 진입하며, IT, BT, NT 등 최첨단 기술의 핵심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 자료 :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정부·민간 합동작업단, 2006.8)

## 2. 주요 추진전략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중소기업정책은 보호 정책적 관점에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자율과 경쟁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정책 내지는 발전전략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정책대상인 중소기업의 자생적 혁신노력과 결합되지 못한 전략은 그 실효성에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그간의 정책

적 노력과 성과가 괴리되었던 주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중소기업의 발전전략으로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혁신노력'을 자극하고 '기업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약자로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기업의 능동적인 혁신의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부문도 더 이상 노동·자본 등 외형적 요소 투입에 의존한 성장방식으로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지양하고 보다 분명한 정책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들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기술·경영 혁신을 통해 대기업 수준의 부가가치를 실현하며, 시장친화적 벤처생태계 내에서 경쟁력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업간 제휴 등 네트워크를 활발히 구축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서비스업의 협업을 활성화해 나가는 동시에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이나 정부와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중소기업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 ◆ 시장친화적 혁신형 기업 생태계 조성 및 혁신체계 구축
- ◆ 대기업 수준 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 ◆ 서비스업간 제휴 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 ◆ 중소서비스업의 협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경쟁력 강화 유도
- ◆ 대기업·정부 연계,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 지원

## 부록 1

###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혁신 대책회의 추진일지>

추진일자	주요 대책 및 추진 내용
2004.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대통령 주재, 제5차 경제민생안정점검회의)</li> <li>- 기업유형과 성장단계에 따른 정책대상별 시책구성</li> <li>-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역량 강화 및 중장기적 구조대책의 강조</li> <li>· 정책대상별 시책 차별화 도모, 인프라 확충</li> </ul> </li> <li>- 산자부, 정통부, 재경부, 공정위 등 9개 부처 참여</li> </ul>
2004. 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 금융지원위원회 개최(중기청)</li> <li>- 재해대비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마련</li> <li>- 기업은행장 등 6개 은행장, 신보와 기보 이사장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li> <li>- 정부와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 합동으로 최근의 내수 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 및 판매대금 회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7.7대책의 세부추진방안 논의</li> </ul>
2004.1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대통령 주재)</li> <li>- 1조원 모태펀드 조성,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자본시장 및 인프라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수립</li> </ul>
2005.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정책혁신 12대 과제 마련 (대통령 주재, 정책혁신과제 및 부품소재 발전전략 회의)</li> <li>- 소상공인, 소기업 등 기업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책을 추진</li> <li>- 중소기업 1만개 실태조사('04.12) 결과를 토대로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선도그룹으로 육성하기 위한 12대 과제 추진</li> </ul>
2005.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금융지원 종합대책 및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점검(재경부, 경제정책조정회의)</li> <li>-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금융분야 대책으로 4개 분야에 걸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기업 대출의 연착륙 유도</li> <li>(2) 시장의 선별기능 강화</li> <li>(3) 수요에 맞는 지원체제 완비</li> <li>(4) 체계적 경영지원</li> </ul> </li> </ul>

추진일자	주요 대책 및 추진 내용
2005. 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대통령 주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li> <li>-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 및 실질적 협력증대방안 모색 (상생협력사례 발표 및 대책보고)</li> <li>- 국무총리, 재경·산자·정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공정·금감·중기특위위원장(정부) 삼성·LG·현대차·SK·한전·포스코·KT회장(대기업) 대동중공업, 동명통산, 유성기업, 알에프텍, 엠텍비전, 터보테크, 컴윈스 대표(중소기업) 전경련·중기협중앙회·대한상의·무역협회 회장(유관기관)</li> </ul>
2005. 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대통령 주재)</li> <li>- 시장 특성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한 틈새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li> </ul>
2005.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회의(산자부장관 주재)</li> <li>- 대·중소기업 협력과 관련한 대기업의 의견수렴</li> </ul>
2005. 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활성화 보완대책</li> <li>-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보육·투자기능 강화 및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보완대책</li> </ul>
2005. 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대통령 주재)</li> <li>- 기술성·사업성 위주의 정책자금·보증 공급 및 민간자금과의 차별성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개편방안 마련</li> </ul>
2005. 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책 점검회의 (대통령 주재)</li> <l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후속조치계획 보고 (성과공유제, 인력지원, 대기업 휴면특허이전 등)</li> <li>- 경제부총리, 산자·정통·노동부장관, 공정위, 중기특위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중기청장, 산자부차관보(정부)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및 제4정조위원장</li> </ul>



추진일자	주요 대책 및 추진 내용
2005.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정책혁신 성과보고회(1차, 대통령 주재)</li> <li>- 정책혁신 기본 틀에 따른 성과점검 실시</li> </ul>
2005.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정책조정회의(중소기업청)</li> <li>-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의 규모기준 조정과 독립성 기준 등 중소기업 제외기준의 개선 및 보완</li> <li>- ‘중소기업 범위조정(안)’ 확정</li> </ul>
2005.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정책혁신 성과점검 회의(대통령 주재)</li> <li>- 중소기업 정책혁신 성과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책성과 점검</li> <li>- 정책정보전달체계 시연회 실시</li> </ul>
2006.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방안 발표(중소기업청)</li> </ul>
2006. 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및 SW 공공 구매 혁신방안(대통령 주재)</li> </ul>
2006.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금융선진화 민간 T/F의 중간보고(대통령 주재)</li> <li>- 중소기업 12개 정책과제 분류 및 구체적인 정책대안 지시</li> </ul>
2006. 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회의(대통령 주재)</li> <l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실적을 점검·평가</li> </ul>
2006. 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정책혁신 성과점검 보고회(2차, 대통령 주재)</li> <li>- 중소기업 정책혁신 성과 점검결과를 지수로 계량화 발표</li> </ul>
2006. 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발표(재정경제부)</li> </ul>

## 부록 2

〈참여정부 전후 중소기업 정책 비교도표〉

구 분	참여정부 이전	참여정부
정책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소투입형</li> <li>○ 보호·육성위주의 지원</li> <li>○ 직접지원위주</li> <li>○ 수시 대응형</li> <li>○ 공급자 중심</li> <li>※1980년대까지 : 보호와 육성</li> <li>※1990년 이후 : 자율과 경쟁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혁신역량 제고</li> <li>○ 경쟁·협력 촉진</li> <li>○ 인프라 확충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li> <li>○ 지속적·구조적 대응</li> <li>○ 수요자 편의성·접근성 제고 및 수요맞춤형</li> </ul>
정책 내용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정책 법률체계 마련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위주의 수출산업 육성</li> <li>-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li> <li>- 중소기업사업조정법(1961)</li> <li>- 중소기업기본법 제정(1966)</li> </ul> </li> <li>○ 현대적 의미의 중소기업정책 추진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품·소재 생산부문의 중소기업 육성</li> <li>-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정 (1975)</li> <li>- 중소기업진흥법 제정(1978)</li> <li>-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1979)</li> <li>- 신용보증기금 설립(1976)</li> <li>- 중소기업 범위 확대(1976)</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정부이전 정책의 평가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접근 미흡 (중소기업의 다양한 유형과 발전단계 등)</li> <li>- 발전 가능성 위주의 집중지원 미진 (창업·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 소홀)</li> <li>-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보호치중 (정책의 역기능)</li> <li>- 정책의 시의성과 연속성 기능 부족 (정책의 사후평가과 실효성 확보 등)</li> <li>- 정책역량의 분산으로 시너지효과 저해 (정책의 조정·통합 부족)</li> </ul> </li> </ul>

구 분	참여정부 이전	참여정부
정 책 내 용 및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육성위주의 중소기업 정책 추진(1980년대)</li> <li>• 시설근대화자금 등 자금지원을 시작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보호·육성시책 전개</li> <li>-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 수립 (1981)</li> <li>-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정 (1982)</li> <li>-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실시 (1982)</li> <li>- 유망중소기업제도(1983)</li> <li>-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1983)</li> <li>-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1984)</li> <li>- 한국은행 재할인제도 도입 (1985)</li> <li>• 산업지원방식 전환 (기능별 지원중심)</li> <li>- 공업발전법 제정(1986)</li> <li>- 기계류,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제도 재정비(1986)</li> <li>-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1986)</li> <li>-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 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198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정부 정책과제 도출 배경</li> <li>• 대내적 환경</li> <li>- 성장축의 다변화 필요성 및 경제 민주화 요구 증대</li> <li>• 대내적 환경</li> <li>- 무한경쟁에 따른 혁신과 효율의 중요성 부각</li> <li>○ 참여정부 정책의 특징</li> <li>•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체질 개선과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강조</li> <li>- 혁신역량 강화,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li> <li>- 기술혁신 및 고용창출의 핵심원천</li> <li>- 혁신주도형 경제의 능동적, 혁신적 성장 동력화</li> </ul>

구 분	참여정부 이전	참여정부
정 책 내 용 및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기조 (1990년대)</li> <li>•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1993)</li> <li>-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시행 (1993)</li> <li>- 고유업종제도, 단체수의계약 제도 축소·운영</li> <li>- 한은 재할인제도의 총액대출 한도제로 전환</li> </ul> </li> <li>• 다원화된 중소기업 특성 반영 (섹터별 시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1994)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li> <li>- 소기업지원특별법(1997)</li> <li>- 여성기업지원특별법(1999)</li> </ul> </li> <li>•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행정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스닥시장 개설(1996)</li> <li>-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1997)</li> <li>- 중소기업지원 행정조직의 강화(중소기업청 신설, 1996)</li> <li>- 중소기업정책개발기능 강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설립, 1998)</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의 주요내용</li> <li>• 시장친화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적 지원제도의 개혁과 경쟁 촉진</li> <li>-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li> <li>- 시장친화적 벤처생태계 조성</li> <li>-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li> </ul> </li> <li>•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li> <li>- 하도급 거래 공정화</li> <li>- 영세 자영업자 대책 및 재래시장 활성화</li> </ul> </li> <li>•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정책혁신 성과점검</li> <li>- 중소기업 정책정보 전달체계 혁신</li> </ul> </li> </ul>

### 부록 3

#### <중소기업의 정책 활용 및 성공사례>

##### 1. 한국로스트왁스(주) , 우선구매제도 활용

###### □ 업체현황

- 업체명 : 한국로스트왁스(주)
- 대표자 : 장세풍
- 설립일자 : 1979. 3.10
- 생산품목 : 가스터빈 1단 고정날개 등
- 종업원수 : 196명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 성공사례 소개

- 활용배경
  - '03년 발전설비 핵심 수입부품인 가스터빈 고정날개를 개발비 50억원을 투입·생산하였으나, 제품 미검증으로 판로개척 애로
  - \* 우선구매(수의계약)시 구매책임 문제 등으로 구매에 부담
- 주요내용
  - (주)동서발전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사용실적이 없는 국산화개발품을 1년간 시범사용·테스트
  - 동서발전이 '05.7월 도입된 성능인증·성능보험제도 및 구매자면책제도를 활용, 우선구매 계약체결('05.12월)
- 활용성과
  - 동서발전 : 20년간 560억원 예산절감
  - 한국로스트왁스(주) : 매출증대 ('03) 78 → ('05) 190억원, 고용창출 ('03) 149 → ('05) 196명

## 2. (주)두손, 공공기관 공공구매제도 활용

### □ 업체현황

- 업체명 : (주)두손
- 생산품목 : 무인·원격제어 곡물사일로

### □ 성공사례 소개

#### ○ 활용배경

- 2004년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성공하고, NT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성능불신 등으로 공공시장 판로 개척에 한계

#### ○ 주요내용

- 2005. 8월 성능이 검증되고 면책이 주어지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 농업기술원 등에 납품(5억원)하는 등 판로 확대 가능

#### ○ 활용성과

- 매출액('04) 43억원 → ('05) 66억원, 고용증대('04) 25명 → ('05) 30명

### 3. 신한콘크리트, 기술혁신개발사업 활용 사례

#### □ 업체현황

- 업체명 : 신한콘크리트
- 대표자 : 이영남
- 설립일자 : 2001년
- 생산품목 : 인조 현무암 관련제품
- 종업원수 : 12명
- 소재지 :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 □ 성공사례 소개

##### ○ 활용배경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을 통한 화산암재(송이)의 원적외선 방사를 이용한 주방용품 개발과 제주석 석분 부산물을 이용한 인조 제주석 개발한 경험 보유
- 기존의 벽돌, 블록제품은 많은 경쟁업체로 인하여 단가하락으로 수익률이 떨어져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품개발 필요

##### ○ 주요내용

- 산학연, TRITAS, 기술혁신개발사업 등을 인조 현무암을 활용한 조형물 제조 금형기술개발로 높은 수익률을 창출
- 공정혁신과 신제품개발의 성공으로 생산 및 판매 등 모든 부분이 향상되었으며, NURI사업을 통한 입체적 조형물제작까지 함으로써 해외시장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음

##### ○ 활용성과

- '05년 매출액 953,754천원으로 전년대비 영업이익률 250%증가

## 4. (주)재영솔루텍, 기술집약적 생산시스템 활용 사례

### □ 업체현황

- 업체명 : (주)재영솔루텍
- 대표자 : 김학권
- 설립일자 : 1976. 9. 1
- 주 생산품목 : 플라스틱 사출금형
- 종업원수 : 2,000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 □ 성공사례 소개

- 활용배경
  - 1981년까지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이것 저것을 생산하다가 방향을 전환하여 오디오, 비디오 등 음향기기에 사용되는 기술집약적 금형생산을 본격화함
- 주요내용
  - 시장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비
    - 금형기술 축적, 핵심인력 확보, 판로개척
  - one-stop service 체제의 구축과 다각화 전략의 추진
  - 지식경영 시스템의 도입과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 금형/부품산업의 포화상태 극복과 신시장 창출 전략의 모색
  - 금형/부품산업 분야의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개념의 시장을 창출하고 국내외 우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을 확보
  - 주요활용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중소기업 인력 고도화 사업, 해외 전문가 기술 컨설팅,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 활용성과
  - 2005년도 기준 매출액 1,392.80억원, 당기순이익 45.89억원 기록



## 5. (주)넥스지텔레콤,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지원자금 활용

### □ 업체현황

- 업체명 : (주)넥스지텔레콤
- 대표자 : 김 선 섭
- 설립일자 : 1998. 4. 9
- 생산품목 : RF Module, Dual-Socket, Camera Module 등
- 종업원수 : 100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 □ 성공사례 소개

- 활용배경
  - 휴대폰 부품개발 전문업체로 설립초기 이후 지속적인 R&D 개발 등을 통해 40 여개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취득
  - 이후 제품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던중 2003년 주 거래처의 부도로 제품의 사업화는 고사하고 경영위기에 봉착
  - 경영애로 타개 및 사업화를 위해 은행 및 보증기관에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그간 기술개발자금 투입으로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담보여력이 부족하여 은행 및 보증기관이 자금지원을 거절
- 주요내용
  - 중진공에서는 기업의 사업성과 기술력을 인정하고, 2003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쳐 사업화에 필요한 원부자재자금 및 제품생산비 4억원을 대출하여 세계 최초인 Dual Socket과 국내 최초인 CCD 카메라 모듈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활용성과
  - 정책활용을 통한 2002년 매출액 33억원에서 2005년 93억원으로 성장

## 6. 옵테론,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지원자금 활용 사례

### □ 업체현황

- 업체명 : (주)옵테론
- 대표자 : 신권식
- 설립일자 : 2000. 4월
- 주 생산품목 : 광 부품(Fiber Array)
- 종업원수 : 28명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 □ 성공사례 소개

#### ○ 활용배경

- 2000년 4월 법인으로 설립하여 6년간 광섬유어레이(Fiber Array) 및 분광측정기를 제조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 사업초기 광산업 활성화를 예상하고 평면형광분배모듈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하여, 동 제품의 사업화 및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에 대출을 요청
- 주거래 은행에서 업체의 담보여력 부족 및 그간 기술개발자금 투입에 따른 재무상태 열악 등 추가투자에 따른 리스크 회피로 자금대출이 거절되어 중진공에 정책자금을 신청

#### ○ 주요내용

- 중진공에서는 기업의 미래성장성인 사업성과 기술성 위주의 기업평가를 통해 동사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433백만원을 자금지원

#### ○ 활용성과

- 정책활용을 통한 매출액이 2004년 42억원에서 2005년 5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 90억원을 계획하고 있음

## 7. 삼원산업사, 삼성전자와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추진사례

### □ 업체현황

- 업체명 : (주)삼원산업사
- 대표자 : 김갑영
- 설립일자 : 1997. 5월
- 주 생산품목 : 전자기구(150억원 매출)
- 종업원수 : 51명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 □ 성공사례 소개

- 활용배경
  - 중국 저가 제품의 한국진출 가시화 및 경쟁사 간 치열한 경쟁 심화
  - 인건비 및 원재료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 주요내용
  - 에어콘 시스템 TANK류 원가 혁신
  - 부품의 공정수가 많고, 원가절감 효과가 큰 부품을 중심으로 공급사와 모기업이 T/F 팀을 구성하고, 전문 컨설팅사를 통하여 과제해결을 지원
  - 정보 수집 및 벤치마킹 등 GVE(Group Value Engineering) 기법을 통한 개선 아이디어 도출 추진
    - ※ GVE(Group Value Engineering) : 소그룹 단위의 생산조직이 설계→디자인→생산→품질 관리로 이어지는 모든 제조공정의 혁신을 공유하며 가치창조를 일상화하는 기법
- 활용성과
  - 부품수 및 재질, 두께 등 공용화와 표준화를 실시하여 원가 절감
  - 가공방법 변경 등 작업공정 단순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 원가절감 20억원/연간 (29%절감)
  - 성과의 공유 : 협력사(60%,12억원), 모기업(40%, 8억원)

## 8. (주)모토닉,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함께 부품 국산화 개발사례

### □ 업체현황

- 업체명 : (주)모토닉
- 대표자 : 김영봉
- 설립일자 : 1974. 3. 7.
- 주 생산품목 : 자동차 부품(2,229억원 매출)
- 종업원수 : 271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 □ 성공사례 소개

#### ○ 활용배경

- 현대자동차의 기술·품질·경영지원으로 협력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WIN-WIN’관계 구축 및 동반성장 추진
- 전 세계적 배기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청정연료 차량 개발 필요

#### ○ 주요내용

##### • LPI-PUMP MOUDLE 공동기술개발

LPI 시스템은 LPG 연료를 고압 액상화시켜 인젝터를 이용하여 기통별로 연료를 분사하는 신기술로 기존 LPG시스템에 비해 기화 과정이 생략되어 겨울철 “시동불량” 및 “타르발생” 을 억제한 첨단 기술

현대자동차 지원사항	(주)모토닉 혁신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개발 전문인력 파견지원</li> <li>- 현장인력 전문기술 교육</li> <li>- 기술개발 연구용 차량제공</li> <li>- 기술개발 자금 지원 10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벤치마킹 및 선행기술조사</li> <li>- 신기술 연구개발(모기업, 산학연)</li> <li>- 시험평가 및 양산설비투자(100억원)</li> <li>- 신기술 국제공동 기술개발</li> </ul>

#### ○ 활용성과

- 원가절감 72억원/연간, 수입 대체효과 320억원/연간
- 성과의 공유 : 협력사(50%, 36억원), 모기업(50%, 36억원)

## 9. (주)코아로직, 기술혁신을 통한 연구개발정책 활용 사례

### □ 업체현황

- 업체명 : (주)코아로직
- 대표자 : 황기수
- 설립일자 : 1998. 4. 2
- 주 생산품목 : Mobile Multimedia SoC(System on Chip) 전문벤처기업
- 종업원수 : 107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 □ 성공사례 소개

- 활용배경
  -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로서 생산은 외부(동부아남 등)에 위탁하는 「팹리스(Fabless) 기업」
  - 주요생산품
    - CAP(Camera Application Processor) : 카메라폰 칩
    - MAP(Multimedia Application Processor) : 휴대폰에서 MP3,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기능 구현을 위한 칩
  - \* LG전자, 삼성전자 등 국내 및 해외 휴대폰 제조업체에 판매
- 주요내용
  - 대규모의 시설투자 없이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제품개발이 가능
  - 고객과의 협력과 상호작용적 기술학습이 중요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20-30%를 상회
    - 총 종업원 중 연구인력수의 비율은 50-60%, 특허출원 총 5건
- 활용성과
  - 정책활용을 통한 2003년 매출액 411억원에서 2004년 1,333억원으로 성장하여 2002 ~ 2004년간 매출 55.5배 증가
  - 2003년 종업원 45명에서 2004년 107명으로 성장

## 10. 우리웃연구회, 영세자영업자 컨설팅 성공사례

### □ 업체현황

- 업체명 : 우리웃연구회
- 대표자 : 배영희
- 생산품목 : 한복제조업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 성공사례 소개

- 활용배경
  - 매출부진으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 : 점포 월세(30만원) 미만의 월수익
  - 부평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자영업컨설팅 제도 소개
- 주요내용
  - 경영진단, 상권 및 입지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통한 주먹구구식 영업 방식 개선
    - 점포이전 : 주택가 골목 1층 ⇒ 대로변 전철역앞 2층
    - 업종변경 : 한복제조업 ⇒ 한복대여 전문점
    - 협력업체 소개 : 예물 주얼리점, 웨딩숍, 뷔페 등
    - 그밖에 홍보판촉, 고객관리, 상품판매전략 등
- 활용성과
  - 매출액 증대 : 월 250만원 ⇒ 월 1,300만원

## 11. 마포최대표, 영세자영업자 컨설팅 성공사례

### □ 업체현황

- 업체명 : 마포최대표
- 대표자 : 안성수
- 생산품목 : 한식(삼겹살)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배미동

### □ 성공사례 소개

- 활용배경
  - 아파트 상권이 침체되어 매출이 떨어진 “당구장” 을 “고기집” 으로 업종변경하기 위하여 컨설팅 신청
- 주요내용
  - 상권분석을 통한 주고객층 파악
  - 인테리어, 메뉴설계, 상호선택, 홍보전략, 식재료 구매정보 등 제공
- 활용성과
  - 매출액 증대 : 현재 일 매출액은 40만원 수준이나 인근 신축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12. 상권분석 컨설팅을 통한 성공사례

### □ 업체현황

- 업체명 : 모가(母家)
- 대표자 : 김대원
- 생산품목 : 한식(김치찌개와 삼겹살)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대입구역 먹자골목

### □ 성공사례 소개

- 활용배경
  - 명예퇴직후 2005. 5월 신규 창업하였으나 식자재 대금과 건물임대료 및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수익이 전혀 없어 매출액 증대를 위해 컨설팅 신청
- 주요내용
  - 주변 상권분석을 통한 매출액 증대 방안 수립
    - 점심시간 메뉴 추가와 저녁시간 웰빙 술안주 추가
    - 입간판 및 보조간판 교체, 내부 배치 변경 등
    - 전단지 배포 등 홍보활동 강화
    - 음식조리의 표준 프로세스 작성, 고객대응 매뉴얼 제공 등
- 활용성과
  - 월매출액 증대 : 월 평균 600만원 ⇒ 월 평균 1,000만원



## 13. 서울 방학동 도깨비 시장 컨설팅 성공사례

### □ 업체현황

- 업체명 : 서울 방학동 도깨비 시장
- 대표자 : 윤종순(번영회장)
- 생산품목 : 재래시장(점포 100여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 □ 성공사례 소개

#### ○ 활용배경

- 외환위기 직후 반경 2km안에 대형할인점이 4곳 입점으로 손님 급감
- 점포들은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줄줄이 도산, 상인들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재래시장 개선사업 참여
- ※ 1980년대부터 상인들이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저녁에 2시간만 반짝 장사를 했다고 해서 ‘도깨비’란 이름이 붙여짐

#### ○ 주요내용

- 2003년 도봉구청에 환경개선사업을 요청. 시장 골목에 대형 아케이드가 설치 및 내부 도로 포장 시장 현대화.
- 2004년 시장번영회는 상인들을 상대로 ‘시장 살리기 아이디어’ 공모
  - ‘매달 하루를 도깨비의 날로 지정해 세일 행사를 하자’ ,
  - ‘우리도 할인점처럼 주민들에게 전단을 배포하자’ 등 아이디어 채택
-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나눠 주는 ‘감사 세일’ , 일주일에 3번 한두개 품목을 불시에 싸게 파는 반짝 세일 등을 실시
- 산지 직거래와 공동구매로 원가절감, 합리적인 마케팅 기업 도입

#### ○ 활용성과

- 재래시장의 세일 광고를 통한 주부고객 확보로 매출 증대

## 14. (주)솔리테크,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활용사례

### □ 업체현황

- 업체명 : (주)솔리테크
- 대표자 : 정준
- 설립일자 : 1998.11.5
- 생산품목 : 이동통신용 광중계기, 광통신장비, 무선통신장비제조 등
- 종업원수 : 161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 □ 성공사례 소개

#### ○ 활용배경

- 2.5세대, WCDMA 중계기 생산을 위한 독자개발능력 및 응용기술, 특히 주요 핵심기술인 회로설계기술 보유
- 2002년 진행된 WCDMA 중계기 성능평가과정에서 SK 텔레콤과 KTF 장비납품 업체 선정, 위성 DMB 사업자인 TU미디어로부터 표준형 깎필러 장비 납품업체 선정
-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 필요

#### ○ 주요내용

- 정통부에서는 용자사업을 통해 2001년과 2005년 2차례에 걸쳐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35억원을 용자지원하여 WiBro, 위성 DMB 등 중계기 분야에서 휴대무선인터넷 단말의 핵심부품을 개발하여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에 기여

#### ○ 활용성과

- 2005년도 7월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매출액은 2005년 기준 697억원으로 2000년 대비 약 3.5배 성장

## 15. (주)픽셀플러스, IT기술개발투자지원사업 활용사례

### □ 업체현황

- 업체명 : 픽셀플러스(주)
- 대표자 : 이서규
- 설립일자 : 2000. 4.12.
- 생산품목 : CMOS 이미지센서 등
- 종업원수 : 75명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 성공사례 소개

#### ○ 활용배경

- CMOS 이미지센서와 이미지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ASIC을 디자인, 공급하는 R&D 전문 업체로써, 지속적인 R&D 개발을 통해 CMOS 이미징 분야에 다수의 특허를 보유
- 창업이후 기술개발에 주력하였던 창업초기 기업으로써 미미한 매출액 등으로 추가 R&D 투자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음

#### ○ 주요내용

- 정통부 투자사업을 통해 결성된 IT전문투자조합(MIC 2001-4호)에서는 CMOS 이미징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의 성장성과 미래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03년에 2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지속적인 R&D 투자와 신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

#### ○ 활용성과

- 투자자금 등을 활용하여 기술개발에 집중함으로써 2002년 매출액 2억원에서 2005년 389억원으로 성장하였으며, 2005년 12월 국내 팹리스 반도체 업체 중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됨

## 부록 4

### <역대정부의 주요 중소기업 정책 변천사>

(1) 중소기업청 설립 이전 : 1945년도 ~ 1996년 2월

추진년도	주요 정책명	주요 추진내용
1945 ~ 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조경제와 중소기업 정책</li> <li>- 원조경제와 중소기업문제 (1950년대)</li> <li>- 경제개발 3개년 계획과 중소기업정책</li> <li>- 민주당 정권하의 중소기업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은 과도한 경쟁 전개, 중소기업문제 구체화됨</li> <li>○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 작성(1956, 최초 중소기업종합육성안)</li> <li>○ 경제개발 3개년계획 작성(1959) -</li> <li>○ 중소기업육성 정책의 적극화</li> <li>- 상공부문에 중소기업전담행정기구 신설(중소기업과)</li> <li>- 중소기업 금융의 확대 : 중소기업자금 대출</li> <li>- 신용보증제도 논의 : 신용보증기금의 모태</li> <li>- 중소기업 조직 태동 : 전국중소기업중앙단체연합회 창설(1960. 7)</li> <li>-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사업 실시(1961)</li> <li>○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종합정책 수립</li> <li>-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1961)</li> </ul>
1961 ~ 1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정책 법률체계 마련 (중소기업 육성기반 설정기)</li> <li>- 중소기업의 조직화 시책 추진</li> <li>- 중소기업상호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도태방지 조치</li> <li>-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li> <li>- 중소기업 전문화 및 계열화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구성, 각계의 의견수렴</li> <li>○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1961. 2)</li> <li>○ 중소기업 전담지원 금융기관의 조직</li> <li>- 중소기업은행(1961), 국민은행(1963)</li> <li>○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정(1961)</li> <li>○ 중소기업기본법 제정(1966)</li> <li>○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정(1964)</li> <li>○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방안 마련(1969)</li> <li>○ 전문화 및 계열화 조성요강 마련(1970)</li> </ul>
1972 ~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적 의미의 중소기업정책 추진 (중소기업육성기반 정비, 확충기)</li> <li>- 중소기업 사업 영역의 확보</li> <li>-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li> <li>-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계강화</li> <li>- 중소기업 근대화 등 종합시책 추진</li> <li>- 중소기업공업육성시책 추진</li> <li>- 중소기업의 전문화 유도시책</li> <li>-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육성시책</li> <li>- 중소기업진흥기금(시설운영자금) 창설 및 지원조직 신설</li> <li>- 신용보증기금 지원조직 신설</li> <li>- 중소기업범위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고유업종(중소기업사업조정법 개정, 1978. 12)</li> <li>○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정(1981)</li> <li>○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정(1975. 12)</li> <li>○ 중소기업진흥법 제정(1978. 12)</li> <li>○ 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 지정-육성(1976)</li> <li>○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li> <li>○ 새마을공장(1973)</li> <li>○ 농가공산품 개발육성→농가공산품 개발본부</li> <li>○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1979)</li> <li>○ 신용보증기금 설립(1976)</li> <li>○ 중소기업범위 확대(1976)</li> <li>○ 중소기업범위 확대(1976)</li> </ul>

추진년도	주요 정책명	주요 추진내용
1982 ~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육성위주의 중소기업 정책 추진 (중소기업시책의 변화·활성화기)</li> <li>- 우선육성업종의 선정, 지원</li> <li>- 유망 중소기업의 지원</li> <li>- 중소기업 창업지원 제도 마련</li> <li>- 기술개발지원</li> <li>- 근대화 지원</li> <li>- 협동화 지원</li> <li>- 농공단지의 조성</li> <li>- 중소기업 물품구매 및 하도급 등 중소기업지원 법률 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계열축진화에 필요한 업종선정</li> <li>○ 우선육성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법상의 근대화, 협동화 및 사업전환과 경영기술지도 실시</li> <li>○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 수립(1981)</li> <li>○ 유망중소기업제도 도입(1983)</li> <li>- 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70개 기관참여</li> <li>- 선정기준(기초소재 및 부품생산기업, 첨단기술 보유기업, 수출촉진 및 수입대체에 기여하는 기업, 국제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기업, 경영과 기술의 개선, 향상으로 성장 가능 기업)</li> <li>○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1986 .5)</li> <li>○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정</li> <li>○ 공업발전법 제정(1986)</li> <li>○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1986)</li> <li>○ 우선육성업종에 자금지원, 경영기술지도 등 집중지원</li> <li>○ 동종 또는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 공장집단지화, 시설공동화, 기업합병, 경영협업화 도모</li> <li>○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1983)</li> <li>○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정(1982)</li> <li>○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실시(1982)</li> <li>○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1984)</li> <li>○ 기계류,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제도 재정비(1986)</li> <li>○ 한국은행 재할인제도 도입(1985)</li> </ul>
1989 ~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기조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기)</li> <li>-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구조경제화 촉진</li> <li>- 중소기업경영애로 타개로 경쟁기반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li> <li>○ 생산자동화 사업의 적극적 추진</li> <li>○ 중소기업 정보화의 확산</li> <li>○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li> <li>○ 경쟁력 약화업종의 사업전환추진</li> <li>○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li> <li>○ 중소기업 공장입지의 공급확대</li> <li>○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확대 및 금융접근성 제고</li> <li>-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1989)</li> </ul>

추진년도	주요 정책명	주요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과의 협력강화와 중소기업사업영역의 보호</li> <li>-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내실화 균형화 도모</li> <li>-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li> <li>- 중소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촉진</li> <li>○ 중층적 전문계열화 추진</li> <li>○ 효율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확보</li> <li>○ 협동화 사업의 확대</li> <li>○ 소기업 육성시책의 강화, 지방중소기업육성시책 강화</li> <li>○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차등화</li> <li>○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의 완화</li> <li>○ 고용의무의 및 감사의 완화</li> <li>○ 기업애로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li> </ul>
1993 ~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경제5개년계획</li> <li>- 구조고도화 촉진 및 생산기술력 강화</li> <li>- 민간부문의 자율적 협력기반 구축</li> <li>- 지방중소기업의 발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망중소제조업체 구조개선사업 지속 추진</li> <li>○ 중소기업 자동화 정보화 사업 확대</li> <li>○ 기술력 강화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li> <li>- 산학연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1993)</li> <li>○ 창업보육센터 설립 확대, 창투자 내실화</li> <li>-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제정(1994. 12)</li> <li>○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기반 조성</li> <li>-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1995. 1)</li> <li>○ 중소기업간 공동협력사업 촉진, 협동화 단지 조성</li> <li>○ 공정한 수급거래 풍토 마련</li> <li>○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지자체별)</li> <li>○ 지자체 중소기업 전담조직 마련,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li> <li>-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1994)</li> <li>○ 지방소재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 설치 운영</li> <li>○ 소기업 육성시책을 특성화, 신용보증기관의 소액간이보증 활성화</li> <li>- 소기업특지원특별법 제정(1994)</li> </ul>

(2) 김영삼정부(문민정부) : 중기청 개청이후 ~ 1998년 2월

추진년도	주요 정책명	주요 추진내용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청 창설</li> <li>○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li> <li>○ 신용보증지원 확대</li> <li>○ 중소기업 채용 박람회 도입</li> <li>○ 원로봉사단 설치·운영</li> <li>○ 중소기업 전문인력취업알선센터 설치</li> <li>○ 중소기업 TV 백화점 개설</li> <li>○ 중소기업 종합유통지원센터 가공</li> <li>○ 중소기업 상품권 발행</li> <li>○ 중소기업 우수제품 마크(GQ) 도입</li> <li>○ 인터넷 중소기업관 구축</li> <li>○ 중소기업 공동상표제 도입</li> <li>○ 창업투자 및 지원 촉진</li> <li>○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신설</li> <li>○ 이업종 교류 확대</li> <li>○ 시장재개발·재건축 등의 요건 완화 및 조합설립 근거 마련</li> <li>○ 내사업장 마련 대출제도 신설</li> <li>○ 지역신용보증조합 신설 지원</li> <li>○ 여성경제인의 날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조직법 개정('96.2.9, 법률 제5150호) - 본청에 1관 5국 26과, 지방에 11개 지방조직 * 중소기업청 개청 : '96.2.12</li> <li>○ 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 설치('96.3)</li> <li>○ 상업어음할인전담재원 신설 : 1조 7,600억원</li> <li>○ 중소기업부도방지자금 조성 : 1조원</li> <li>○ 중소기업 공제사업제도 개편 - 어음 할인대출 중심에서 연쇄부도 방지대출 위주로 전환 - 어음보험제도 신설</li> <li>○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운용배수 확대(15배→17배)</li> <li>○ 기술특례보증제도 도입·시행('96.4)</li> <li>○ 총 8회 개최, 1,468업체, 21천명 채용</li> <li>○ '96. 8월, 대기업체·금융기관 퇴직인력 활용 본청과 지방청에 설치(631명, 1,552건 상담·지도 실시)</li> <li>○ '97. 12월</li> <li>○ '96. 4월 개설, 32회 585업체의 928품목 방송</li> <li>○ '96. 4월, 건평 23,470평(지하 5층, 지상 17층)</li> <li>○ '96. 8월, 전국 3,000여개 가맹점을 통해 200억원 발행</li> <li>○ '9월</li> <li>○ '96. 7월 214개 기업 홈페이지, 846개 제품 카탈로그 수록</li> <li>○ '98. 5월, 중소 생활용품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정</li> <li>○ Stock-Option 소득세 비과세 ○ 창투조합출자에 의한 지분등의 양도차익 법인세 감면 ○ 창투사등이 창업자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지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li> <li>○ '96. 7월,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제도 신설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95.12)</li> <li>○ 이업종교류 프라자, 이업종교류 촉진대회 등 개최 (5월, 11월)</li> <li>○ '96. 1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05.12)</li> <li>○ 중소기업유통업체의 시설·운영자금 지원(최고 5억원)</li> <li>○ 대구, 광주, 경기, 경남지역 신용보증조합 설립 지원</li> <li>○ 매년 7월 6일을 여성경제인의 날로 지정</li> </ul>



추진년도	주요 정책명	주요 추진내용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사랑통장 신설</li> <li>○ 어음보험제도 시험운영</li> <li>○ 회생특례지원제도 시행</li> <li>○ 산업기능요원 채용 박람회 개최</li> <li>○ 중소기업 연수 확대·강화</li> <li>○ 중소기업 전문인력 취업 알선센터 설치</li> <li>○ 중소기업 제품홍보 강화</li> <li>○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업무 개시</li> <li>○ 단체수의계약 내실화 추진</li> <li>○ 공동상표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li> <li>○ 벤처기업 창업타운 건립 추진</li> <l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li> <li>○ 대학생 등 벤처창업 촉진</li> <li>○ 벤처기업 창업시 신용보증 특례 지원</li> <li>○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 도입·시행</li> <li>○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본격 시행</li> <li>○ 기술력 평가기준의 개발·보급</li> <li>○ 소규모 점포의 시설현대화 세부 추진지침 마련</li> <li>○ 유통정보화(POS) 도입업체 지원</li> <li>○ 중소유통업체 공동물류센터 설립</li> <li>○ 지역신용보증조합 신설 지원</li> <li>○ 지방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지원</li> <li>○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정·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억원 계약고 달성</li> <li>○ '97. 9월, 신용보증기금에 100억원 출연</li> <li>○ '97. 2월, 300억원 조성</li> <li>○ 3,300명 참여, 1,612명 채용</li> <li>○ 전문인력양성연수, 최고경영자연수 개설</li> <li>○ 품질인증전문요원 양성과정 확대(33회, 1,050명)</li> <li>○ '97. 12월</li> <li>○ MBC “TV 큰시장” 프로그램 신설</li> <li>○ MBN 등 3중 CATV 이용 홍보 추진</li> <li>○ '97. 7월</li> <li>○ 품목 축소(289품목→260품목), 물량배정 기준을 기술 및 품질 위주로 개선</li> <li>○ 공동상표 육성 위한 자금, 기술, 홍보 및 판로, 수출 마케팅 지원방안 수립</li> <li>○ 대덕 과학산업단지 내에 벤처캐피탈, 연구소, 벤처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창업타운 건립 추진</li> <li>○ '97.8월, 법률 제538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투자, 기술·인력·입지 등 지원 근거 마련</li> </ul> </li> <li>○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26개 대학)</li> <li>○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및 벤처 로드쇼 개최(15회)</li> <li>○ 기술력 있는 예비창업자에 대해 사업계획 평가후 5억원이내 특례보증 지원</li> <li>○ '97. 8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li> <li>○ 666업체, 300억원 지원</li> <li>○ 3개 분야 18항목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금융기관·중진공·신용보증기관에 보급</li> <li>○ '97. 3월</li> <li>○ 부가세 1% 감면</li> <li>○ '97. 11월, 삼성물산과 중소유통업단체 공동으로 추진</li> <li>○ 부산, 인천, 대전</li> <li>○ 강원, 경북, 충북</li> <li>○ '97. 4월 제정, '97. 8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기업관련 각종 행정규제 철폐</li> <li>- 각종 지원 및 부담금 특례규정 제정</li> </ul> </li> </ul>

(3)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 1998년 3월 ~ 2003년 2월

추진년도	주요 정책명	주요 추진내용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청 조직 개편</li> <li>○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대폭 확대</li> <li>○ 중소기업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li> <li>○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경색 완화대책 수립·추진</li> <li>○ 중소기업진흥공단 통한 직접대출 시행</li> <li>○ 어음보험사업 본격 운영</li> <li>○ 어음보험사업 제도 개선</li> <li>○ 신용보증재원 출연 대폭 확대</li> <li>○ 중소기업 연합채권 발행</li> <li>○ ADB 자금활용 특별보증 실시</li> <li>○ 신용보증 한도 대폭 확대</li> <li>○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실업 대책 추진</li> <li>○ 실직자의 중소기업 재취업 훈련과정 설치·운영</li> <li>○ 창업강좌기관 지정</li> <li>○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설치</li> <li>○ 무역·투자촉진단 신설</li> <li>○ 중소기업 경영기술지원단 운영</li> <li>○ 벤처기업 규제완화</li> <li>○ 벤처기업 창업타운 시범 사업 실시</li> <li>○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요건 완화</li> <li>○ 국민투자조합 1호 결성</li> <li>○ 코스닥시장 거래활성화 위한 자본금 증자</li> <li>○ 소기업 육성자금 신설·지원</li> <li>○ 지방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li> <li>○ 지역특화 중소기업 집적·활성화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 2월, 1과 5과 축소, 정원91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정책기능 보강(산업자원부에서 이관)</li> <li>- 업종·기능 혼합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li> <li>- 벤처기업국 신설, 지방청 조직 강화</li> </ul> </li> <li>○ ('97)3.6조원 →('98) 7.6조원</li> <li>○ '98. 2월, 원화대출금(31.1조원) 6개월, 외화대출금(12.3억불) 1년</li> <li>○ 중소기업 여신만기 연장(84조원)</li> <li>○ 퇴출대기업, 정리은행 거래기업에 대한 특별보증(1.8조원)</li> <li>○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 등</li> <li>○ '98. 9월, 구조개선자금 5,300억원</li> <li>○ 재원 1,500억원</li> <li>○ 소액보험 가입절차 간소화(1월), 가입대상 요건 및 업종 확대(2월), 보험요율 차등화(8월) 등</li> <li>○ ('97) 0.6조원 → ('98) 1.3조원 + 외화 20억불</li> <li>○ '98. 9월, 5업체 82억원</li> <li>○ '98. 1월, 신용보증기관에 출연(10억불)</li> <li>○ '98. 2월, 동일업체당 15억원→30억원으로 확대</li> <li>○ 산업단지 기동 지원(195단지, 51만명)</li> <li>○ 기술인력 지원(679업체, 5만명), Y2K 지원(6,342업체, 16만명)</li> <li>○ 중진공 연수원에 14개 분야 53개 훈련과정 운영</li> <li>○ 대학·연구소 등 41개 기관, 5,200명 창업교육 실시</li> <li>○ '98. 12월, 전국 11개 지방청에 설치, 무역금융 등 수출관련 지원</li> <li>○ 25회 322업체</li> <li>○ '98. 5월, 구 '원로봉사단' 명칭 변경 및 운영 활성화</li> <li>○ '98. 2월, 9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납입자본금 인하(5천만원→2천만원)</li> <li>- 실험실 창업허용, 사외전문인력의 스톡옵션 허용 등</li> </ul> </li> <li>○ 대전과학산업단지내 조성(100억원 지원)</li> <li>○ '98. 7월</li> <li>○ 80억원 결성, 6업체 20.2억원 투자</li> <li>○ 정부 50억원 출자</li> <li>○ 12,185업체 5,277억원</li> <li>○ 광주, 대전, 제주 3개 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li> <li>○ '98. 6월</li> </ul>

추진년도	주요 정책명	주요 추진내용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청 조직 개편</li> <li>○ 중소기업 직접대출 확대</li> <li>○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설</li> <li>○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li> <li>○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 (ABS) 발행 추진</li> <li>○ 부분보증제도 도입·시행</li> <li>○ 어음보험제도 개선</li> <li>○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5개년 계획 수립·추진</li> <li>○ 중소기업 기술거래소 설치</li> <li>○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체제 인증기준 제정</li> <li>○ 한·중 하이테크 및 제품 박람회 개최</li> <li>○ 벤처기업 창업여건 개선</li> <li>○ 창업절차 간소화</li> <li>○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엔젤 투자 확대 유도</li> <li>○ 벤처넷 구축·운영</li> <li>○ 벤처캐피탈 활성화 지원</li> <li>○ 한국벤처투자조합 설치·운영</li> <li>○ 창업투자회사 발행 회사채 신용보증제도 도입</li> <li>○ 수출중소·벤처기업 변화사단 구성</li> <li>○ 구매 정보망 구축·운영</li> <li>○ 중소기업 종합유통센터 건립·운영</li> <li>○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국가조달 입찰자격 부여</li> <li>○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li> <li>○ 지방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li> <li>○ 지방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강화</li> <li>○ 여성기업 지원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 5월, 1국 5과 56명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로지원국 폐지, 국립기술품질원 이관(산업자원부) 등</li> </ul> </li> <li>○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대상을 기존 구조 개선자금 외에 경영안정자금 추가</li> <li>○ 순수 운전자금 용도로 7,160억원 지원</li> <li>○ '99. 3월~8월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자금에 대해 6개월 연장</li> <li>○ '99. 5월, 자산유동화에관한업무처리규정 개정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발행권한 부여</li> <li>○ '99. 4월, 보증기관 책임분담비율 85%</li> <li>○ '3월, 보험가입 대상요건 완화, 어음발행인에 대한 인수한도 신설, 소액보험 인수한도 확대 등</li> <li>○ 기술지원시책 평가, 중장기 목표 및 연차별 실행 계획 마련, 21c 유망기술 및 품목 선정 등</li> <li>○ '99. 1월, 중소기업진흥공단내 설치</li> <li>○ '99. 11월</li> <li>○ '99. 12월, 중소기업청과 중국 과기부 공동 개최</li> <li>○ '99. 5월, 실험실 창업기업 공장등록 허용, 벤처기업의 최소 자본금 인하(5천만원→2천만원),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 허용 등</li> <li>○ '99. 2월, 공장설립시 인·허가 의제대상 확대(62개→69개), 민원자동승인제도 도입 등</li> <li>○ '99. 4월, 엔젤투자조합 결성자본금 인하(10억원→1천만원)</li> <li>○ '99. 8월, 엔젤투자 소득공제(30%) 및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li> <li>○ '99. 6월, 벤처 창업·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li> <li>○ '99. 5월, 창업투자조합 결성자본금 인하(30억원→10억원)</li> <li>○ '99. 8월,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자금 소득공제 확대(20%→30%)</li> <li>○ '99. 9월, 1,000억원 펀드 설립</li> <li>○ '99. 6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원</li> <li>○ '99. 3월, 법무부와 공동으로 구성(변호사 21명)</li> <li>○ '99. 1월,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입찰참여 확대 도모</li> <li>○ '99. 12월, 부지 3천평, 연건평 23.6천평</li> <li>○ '99. 9월</li> <li>○ '99. 2월,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 설치(30개소)</li> <li>○ 3개 시·도(서울, 울산, 경남)에 150억원 지원</li> <li>○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99. 9)</li> <li>○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지원(서울, 강원, 충북, 경북)</li> <li>○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99.2)</li> <li>○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99.7)</li> <li>○ 여성기업 육성시책 수립·추진 등</li> </ul>

추진년도	주요 정책명	주요 추진내용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개선 방안 마련</li> <li>○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설·운용</li> <li>○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 본격 발행</li> <li>○ 기업개선펀드 결성</li> <li>○ 부분보증제 확대 시행</li> <li>○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5개년 계획 수립·시행</li> <li>○ 중소기업 필요기술 수요조사 실시</li> <li>○ 제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최</li> <li>○ 기술이전센터 지정·운영</li> <li>○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주간 설정</li> <li>○ 중소기업 정보화 사범 인증사업 실시</li> <li>○ 벤처·인터넷산업 활성화 종합대책마련·추진</li> <li>○ 벤처기업 전국대회 개최</li> <li>○ 벤처투자재원 1조원 조성 추진</li> <li>○ 창업투자회사의 조합관리 강화</li> <li>○ 벤처기업 M&amp;A 활성화 지원</li> <li>○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li> <li>○ 한국벤처지원센터(KVC) 개소</li> <li>○ 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조사</li> <li>○ 중소기업 고유업종 단계적 해제</li> <li>○ 기업구매자금채출제도 도입·시행</li> <li>○ 중소기업 남북경제협력 추진 협의회 설치·운영</li> <li>○ 남북경협 전담창구 설치</li> <li>○ 소상공인 지원 법적 근거 마련</li> <li>○ 소상공인지원센터 추가 설치</li> <li>○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li> <li>○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 설립</li> <li>○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li> <li>○ 외국인연수생 연수취업제 시행</li> <li>○ 중소기업 범위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 1월, 자금별 지원대상 차별화, 동일기업에 대한 통합한도제 도입 등</li> <li>○ 특허 등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li> <li>○ 2차에 걸쳐 1,720억원 발행</li> <li>○ '00. 8월, 구조조정전문회사를 통한 중소기업 투자 지원(민간기금 150억원, 재정자금 150억원)</li> <li>○ 신규 공급분 대비 상반기 50%, 하반기 75%로 확대</li> <li>○ '00. 8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미래성장형 기술 집중지원, 연차별 실행계획 추진 등</li> <li>○ '00. 3월~5월, 470개 과제 발굴, 기술개발 지원 추진</li> <li>○ '00. 8월</li> <li>○ '00. 1월, 9개 대학에 센터 지정</li> <li>○ '00. 5월</li> <li>○ '00. 11월, 31개 업체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li> <li>○ '00. 9월, 재경부·산자부·정통부·금감위·중기청 합동 - 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 중심으로 운영, 벤처기업 M&amp;A 활성화 지원, 투자자금 공급 확대 등</li> <li>○ '00. 9월, 수출·투자 박람회, 벤처마트, 벤처포럼 등</li> <li>○ 재정자금 3,000억원(중기청 2,500억원, 정통부 500억원), 민간투자자금 7,000억원으로 조성</li> <li>○ 창업투자조합 등록제 도입, 일반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범위내에서 유한책임제 적용</li> <li>○ 벤처기업 M&amp;A펀드 조성(1,000억원)</li> <li>○ 주식 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등</li> <li>○ 벤처기업 군집지역을 대상으로 20여개 지정</li> <li>* '00. 1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li> <li>○ '00. 11월, 미국 워싱턴 D.C.</li> <li>○ '00. 5-6월, 4,500개 중소제조업체 기술인력 및 수요조사</li> <li>○ '00. 9월, 봉제완구, 앨범 등 43개 업종 해제</li> <li>○ '00. 5월</li> <li>○ '8월, 통일부, KOTRA 등 16개 기관으로 구성, 남북경협 지원시책 수립·추진</li> <li>○ 중소기업 남북협력지원센터 설치(중진공, '00. 6)</li> <li>○ 남북경제협력팀 신설(중기협, '00.10)</li> <li>○ '00. 1월,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li> <li>○ 30개 센터 → 50개 센터</li> <li>○ 서울 등 7개 지역에 설치</li> <li>○ '00. 8월, 지역재단의 공동이익 증진 기반 마련</li> <li>○ '00. 3월, 재단설립, 기본재산조성, 보증운용 등 근거 마련</li> <li>○ '00. 4월, 연수기간(2년) 종료후 일정 자격시험 거치는 경우 1년간 연장근무 허용</li> <li>○ '00. 12월, 제조업·건설업 특례기준 폐지(152개) 및 종업원 300명 미만으로 단일화, 자본금 기준 도입 등</li> </ul>

추진년도	주요 정책명	주요 추진내용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자금 금리인하</li> <li>○ 수출중소기업 외화자금 조달 지원</li> <li>○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본격 지원</li> <li>○ 정책자금 운용실태 조사</li> <li>○ 어음보험제도 개선</li> <li>○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정</li> <li>○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및 One-Stop 자금대출</li> <li>○ 중소기업 지원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li> <li>○ 중소·벤처 창업자금 대폭 확대</li> <li>○ 벤처투자자금 1조원 추가 조성</li> <li>○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본격화</li> <li>○ 창투사 대출채권유동화증권(CLO) 발행</li> <li>○ 벤처캐피탈 관리 강화</li> <li>○ 벤처넷 대폭 개편</li> <li>○ 중소기업 3만개 IT화 추진</li> <li>○ 범정부적 인력실태조사 실시</li> <li>○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개선</li> <li>○ 외국 전문인력 도입 시범 실시</li> <li>○ 인터넷 중소기업 인력채용 박람회 개최</li> <li>○ 중소기업 PL 대응지원체계 구축</li> <li>○ 기업 구매자금용 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li> <li>○ 수출중소기업 지원 대폭 확대</li> <li>○ 월드컵관련 유망중소기업 집중 지원</li> <li>○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 완화</li> <li>○ 여성기업 투자펀드 조성</li> <li>○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 1월(7.5%→6.75%), '01. 9월(6.75%→6.25%)</li> <li>○ 재정자금 300억원 투입, 3억불 규모 회사채 발행 추진</li> <li>○ 196개사 33,447백만원</li> <li>○ '01. 4월~6월, 구조개선자금 및 중소벤처창업자금 수혜기업 500개 업체</li> <li>○ '01. 2월, 보험요율 인상, 신용등급제로의 심사방식 전환, 인수한도 조정, 사이버 어음보험제도 시행 등</li> <li>○ '01. 5월, 기술지원사업 체계화 및 단일법률로 통합</li> <li>○ '01. 8월, 기술신보 보증 및 5개 은행 대출 위한 금융협약 체결</li> <li>○ 274개 대학·연구소의 인력, 장비 등 DB화</li> <li>○ ('00) 2,115억원 → ('01) 3,200억원</li> <li>○ 재정 1,700억원, 민간 8,300억원</li> <li>○ 각종 부담금 면제, 인프라 확충 지원(300억원)</li> <li>○ '01. 6월, 13개 창투사 대상으로 491억원 발행</li> <li>○ 창투사회계처리준칙,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제정('01.11)</li> <li>○ 창투사 등록·등록취소 요건 강화('01.12) 등</li> <li>○ 지역넷 구축 및 벤처인터넷 방송 개국('01.12)</li> <li>○ '01. 4월, 국가전략회의에서 '03년까지 3만개 육성 추진</li> <li>○ '01. 6월~8월, 국무총리실, 교육부 등 15개 기관 공동으로 조사서 작성, 산업인력 실태조사 실시</li> <li>○ 연수생 이탈률 고려 국가별 배정한도 조정</li> <li>○ 불법체류자 단속, 통계체계 개선 등</li> <li>○ 50개 업체, 50명 외국 전문인력 도입 지원 (항공료, 6개월간 체제비의 50% 등)</li> <li>○ '01. 1월~2월, 1,000여명 채용</li> <li>○ PL대응 종합지원계획 수립·시행('01. 3)</li> <li>○ 민·관 합동 중소기업 PL 대책반 구성·운영('01. 5)</li> <li>○ 인터넷 활용 PL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01. 12)</li> <li>○ '01. 7월</li> <li>○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확대 : ('00) 1,000개사→('01) 2,000개사</li> <li>○ 수출초기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 : ('00) 100억원→('01) 500억원</li> <li>○ 품질, 마케팅, 디자인개발 지원 등 추진(316개사)</li> <li>○ '01. 6월, 발기인 수 1인 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주식회사 설립 가능</li> <li>○ 100억원(정부 40억원, 민간 60억원)</li> <li>○ 하계·동계 방학중 실시, 체험활동 참여자에 대한 취업연계 추진</li> </ul>

추진년도	주요 정책명	주요 추진내용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지원 박람회 개최</li> <li>○ 정책자금 사후관리 강화</li> <li>○ Inno-Biz기업 육성 종합대책 추진</li> <li>○ 신기술 Idea 사업화 타당성 평가지원사업 개시</li> <li>○ 청소년 Bizcod 프로그램 시범 운영</li> <li>○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컨설팅 과정 개설·지원</li> <li>○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li> <li>○ 벤처기업 윤리경영 강화</li> <li>○ 창업투자회사 회계처리기준 제정</li> <li>○ 교수·연구원 창업활성화 방안 마련</li> <li>○ 중소기업 창업자금 개선</li> <li>○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li> <li>○ 서비스업 중소기업 범위 확대</li> <li>○ 소상공인 지원 강화</li> <li>○ 중소기업 구매정보망 구축·운영</li> <li>○ 재래시장 지원업무 일원화</li> <li>○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추진</li> <li>○ 해외유통망시장 진출 지원</li> <li>○ 외국인 산업연수생 운영 제도 개선</li> <li>○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 대폭 확대</li> <li>○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 1월</li> <li>○ '02. 4~10월, 정책자금 수혜기업 실태조사(800업체)</li> <li>○ '02. 2월, Inno-Biz기업 활성화 계획 수립</li> <li>○ '02. 3월, 기술신보 보증기준 완화('02. 3)</li> <li>○ '02. 6월, 신용지원 은행 추가 협약(10개 은행)</li> <li>○ '02. 4월, Inno-Biz 투자펀드 300억원 조성</li> <li>○ '02. 7~12월, Inno-Biz 사후관리기준 제정</li> <li>○ 220개 과제, 50억원</li> <li>○ '02. 5월, 운용요령 제정·고시</li> <li>○ '02. 8월, 16개교</li> <li>○ Inno-Biz컨설팅, PL컨설팅 등 5개 과정 1,213업체에 컨설팅 비용의 60~80% 지원</li> <li>○ '02. 3월, 4개 지구 신규 지정(청원, 마산, 광주, 구미)</li> <li>○ '02. 1월, 벤처기업 윤리강령 제정</li> <li>○ '02. 8월, 벤처윤리위원회 설치</li> <li>○ '02. 3월, 창투자 회계처리 통일성 확보위해 제정</li> <li>○ 대학·국립연구원 실태조사('02.3)</li> <li>○ 창업활성화 연구용역('02. 9~12)</li> <li>○ '02. 1월, 지원조건 개선(지원한도, 상환기간, 금리)</li> <li>○ '02. 5월, 지원제도 개선(신용대출 확대, 용자의 출자 전환, 지원절차 간소화 등)</li> <li>○ 조합기능 활성화 모델 제시 및 평가모형 구축 ('02.3~4월, 41개 항목 및 137개 평가지표 개발)</li> <li>○ '02. 5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범위를 도매, 상품중개업 등 6개 분야로 확대</li> </ul> </li> <li>○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 확대(전북신용보증재단)</li> <li>○ 보증지원 규모 확대(6,000억원→9,000억원)</li> <li>○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델 개발·보급('02. 4)</li> <li>○ '02. 10월, 79개 공공기관 발주정보 제공</li> <li>○ '02. 8월, 산업자원부에서 수행하던 재래시장 환경 개선 및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li> <li>○ '02. 1월, 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시설 현대화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li> </ul> </li> <li>○ '02. 9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li> <li>○ '02. 3월, 지원계획 수립</li> <li>○ '02. 5월, 유통체인 진출 타켓품목 50개사 선정·지원</li> <li>○ 연수취업기간 조정(연수2년+취업1년→연수1년+취업2년)</li> <li>○ 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운영규정 제정('02.2)</li> <li>○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 수립('02.3)</li> <li>○ 연수운영과정을 송출기관 책임관리체제로 전환('02.8)</li> <li>○ ('01) 45명 → ('02) 150명</li> <li>○ '02. 1월,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규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9개 과제, 286억원</li> </ul> </li> </ul>



(4) 노무현정부(참여정부) : 2003년 3월 ~ 2005년 말 기준

추진년도	주요 정책명	주요 추진내용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정책개편 방안 마련</li> <li>○ 중소기업 장기 발전비전 및 육성전략 수립</li> <li>○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li> <li>○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재보증 시행</li> <li>○ 어음보험 확대 시행</li> <li>○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계획 수립</li> <li>○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추진</li> <li>○ 정보화지원 전문기업 (TIMPs) 제도 본격 추진</li> <li>○ 벤처기업 M&amp;A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li> <li>○ 펀드매니저 중심의 유한 회사형 벤처캐피탈 도입</li> <li>○ 창업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li> <li>○ 대한민국 벤처 창업대전 개최</li> <li>○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li> <li>○ 중소기업 인력지원 체계 재정비</li> <li>○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li> <li>○ 수출인큐베이터 확대 설치</li> <li>○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li> <li>○ PL사고 예방위한 지원 강화</li> <li>○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방안 마련</li> <li>○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li> <li>○ 재래시장 활성화위한 특별 조치법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 6월, 중소기업 정책목표 및 추진방식을 환경 변화에 맞게 전환 * 자율·경쟁촉진, 간접지원 위주 등으로 전환</li> <li>○ '03.12월, 향후 10년간 중소기업 발전비전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 마련</li> <li>○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03. 11)</li> <li>○ 유사 정책자금 통합·정비(10종→7종)</li> <li>○ 구조개선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제조업→전업종)</li> <li>○ 지역재단 보증금액의 50% 재보증 실시</li> <li>○ 어음보험의 보험대상을 매출채권으로 확대</li> <li>○ '03. 12월, 5년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전과 시책 제시</li> <li>○ 국방부 3개 기관 참여(36개 품목)</li> <li>○ 정보화 선도형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03.4)</li> <li>○ 외부 전문기업을 활용한 정보화 선도기업 육성(100개사)</li> <li>○ '03. 6월, 주식교환 현물출자 특례 인정, 소규모 M&amp;A의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등 법적 요건 완화</li> <li>○ '03. 5월, 기존 주식회사형 창투사 제도 한계 극복 위해 시범 도입(90억원 출자, 300억원 조성)</li> <li>○ '03. 10월, 창업인프라 기반 구축, 창업일괄 지원 체제 구축 등 7대 추진과제 도출</li> <li>○ '03. 11월, 창업 박람회, 창업경연대회 등 각종 창업관련 행사를 통합하여 내실화 도모</li> <li>○ 미국 보스턴에 공동 A/S 물류센터 설치('03.7)</li> <li>○ 민간기업을 벤처기업 해외지원센터로 지정 (12개국, 25개 센터)</li> <li>○ '03. 8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정</li> <li>○ '03. 10월, 산업연수제·고용허가제 병행실시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마련</li> <li>○ '03. 6~9월, 공공기관별 우선구매 실태 전면조사 실시</li> <li>○ '03. 11월, 신기술제품 구매 촉진방안 수립</li> <li>○ 중국 등 주요거점에 2개소 추가 설치(3개소→5개소)</li> <li>○ '03. 11월, 개성공단내 중소기업 사무소 설치, 북한진출 중소기업 지원 전용자금 조성 등</li> <li>○ PL수준평가제 도입 위한 연구용역('03. 7~10)</li> <li>○ PL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03. 8)</li> <li>○ '03. 6월, 전경련, 중앙회, 우리청 공동으로 T/F 구성, 지정계열화 제도를 자율적 생산협력체제로 전환</li> <li>○ '03. 9월</li> <li>○ '03. 5월, 시장등록 의무화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li> </ul>

추진년도	주요 정책명	주요 추진내용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시행</li> <li>○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수립</li> <li>○ 기업별 신용등급제 개편</li> <li>○ 기술신용평가 모델 개발</li> <li>○ 민간금융시장을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li> <li>○ Network Loan 제도 참여 확대</li> <li>○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li> <li>○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활성화 추진</li> <li>○ 신기술제품 20% 우선구매 기관 확대</li> <li>○ 창업절차 개선 및 규제 완화</li> <li>○ 창업대학원 개설·운영</li> <li>○ 벤처기업 ASP센터 설치 확대</li> <li>○ 벤처기업 M&amp;A 활성화 위한 법·제도 정비</li> <li>○ 벤처투자환경 조성위한 제도 개선</li> <li>○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추진</li> <li>○ 산업연수제 개선방안 마련</li> <li>○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 계획 수립</li> <li>○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추진</li> <li>○ 중소기업 고유브랜드 육성</li> <li>○ 중소기업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li> <li>○ 단체수익계약제도 개편 추진</li> <li>○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li> <li>○ 대·중소기업협력 지원 강화</li> <li>○ 재래시장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 7월, 기업유형별·성장단계별 수요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위한 대책 마련</li> <li>○ '04. 12월, 1조원 모태펀드 조성, 코스닥시장 활성화, 벤처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li> <li>○ '04. 1월, 정책자금 평가방식을 변경(점수제→등급제)</li> <li>○ '04. 12월, 기술신용평가기획단 구성, 모델 개발</li> <li>○ 중소기업 전용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 4,000억원</li> <li>○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P-CBO 발행 : 5,000억원</li> <li>○ 5개 은행, 52개 대기업 참여</li> <li>○ 1조원 공급</li> <li>○ 기술평가단 독립('04.7)</li> <li>○ 기술창업기업 전문 신용보증기관으로 특화 추진</li> <li>○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 전 부처·공공기관</li> <li>○ '04. 12월,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 단축(30일→20일), 일괄의제 대상 확대(48개→65개) 등</li> <li>○ 권역별 5개 대학 선정('04.11) 및 교육생 모집('04. 9~11)</li> <li>○ LA ASP 센터('04.5), 파리지부('04.10)</li> <l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04.1) 및 시행령('04.4) 개정</li> <li>*주식교환 현물출자 특례 인정, M&amp;M 절차 간소화 등</li> <li>○ 벤처기업 구조조정전문위원회 구성('04.6)</li> <li>○ 창업투자회사 관리감독 개선대책 수립('04.4)</li> <li>○ 창업투자회사 평가모델 개발('04.9)</li> <li>○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확대(197억원→297억원)</li> <li>○ 장기근속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분양 지원(570채)</li> <li>○ '04. 9월, 연수취업 자격시험 및 교육 폐지, 송출 기관 관리 강화 등</li> <li>○ '04. 11월, 관계부처 협의, 국민공모, 업계 건의사항 반영, 인력수급 전망 및 지원계획 등</li> <li>○ 업종별·지역별 조합 활용, 미취업자 채용 지원(6,700명)</li> <li>○ 공동상표 개발지원(6개) 및 KAIST 브랜드 지원(20업체)</li> <li>○ 민간해외지원센터 확대(24개→38개)</li> <li>○ 수출인큐베이터 추가 설치('04.11, 상파울로, 호치민)</li> <li>○ 제도개편위원회 구성('04.5), 공개토론회('04.6) 및 공청회 개최('04.8)</li> <li>*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도입, 공공구매 확대 등</li> <li>○ 협동조합 실태조사('04.9~10, 495개 조합)</li> <li>○ 협동조합 공동 구·판매사업 자금 지원 등 기능 활성화 사업 추진('04.10)</li> <li>○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설치('04.12)</li> <li>○ 대·중소기업 협력펀드 결성(250억원)</li> <li>○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04.9)</li> <li>○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확대(202개 시장, 1,150억원)</li> <li>○ 재래시장 박람회 개최('04.11) 등</li> </ul>



추진년도	주요 정책명	주요 추진내용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정책혁신 12대 과제 마련·추진</li> <li>○ 중소기업 정책금융 개편 방안 마련</li> <li>○ 신용보증제도 개편</li> <li>○ 보증·투자 복합상품 시행</li> <li>○ 벤처기업 활성화 보완 대책 마련</li> <li>○ 벤처기업 투자재원 확보 방안 마련</li> <li>○ 모태펀드 관리전문기관 개소</li> <li>○ 벤처캐피탈 역량제고 위한 제도개선</li> <li>○ 벤처캐피탈 투명성 제고</li> <li>○ 벤처확인제도 개편</li> <li>○ Inno-Biz 업체 경영실태 조사 실시</li> <li>○ 온라인 쿠폰제(e-Coupon) 컨설팅 도입</li> <li>○ 창업보육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li> <li>○ 기술창업패키지 1000 사업 추진</li> <li>○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지원</li> <li>○ 해외고급기술인력 지원 사업 개선</li> <li>○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추진</li> <li>○ 기업-공고 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 실시</li> <li>○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보완</li> <li>○ 공공구매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li> <li>○ 중소기업 제품 전용 TV채널 확보</li> <l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li> <li>○ 소상공인 지원 강화</li> <li>○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1월, 중소기업 1만개 실태조사('04.12) 결과를 토대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방안 수립</li> <li>○ '05. 6월, 기술성·사업성 위주의 정책자금 및 보증 공급, 민간자금과의 차별성 강화</li> <li>○ '05. 6월,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 확대, 부분보증 비율 확대, 보증료 운용 개편 등</li> <li>○ '05. 3월,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보증과 투자를 복합 지원(신보 500억원, 기보 100억원)</li> <li>○ '05. 6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보육·투자기능 강화, 경영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li> <li>○ '05. 3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모태펀드 근거 등), 1조원 규모 투자재원 조성방안 마련</li> <li>○ '05. 6월, 한국투자벤처(주) 개소</li> <li>○ '05. 3월, 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및 투자조합 출자비율 완화 등</li> <li>○ '05. 6월, 창업투자회사 평가시스템 구축 및 공시 시스템 개발·운영</li> <li>○ '05. 11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 벤처기업 확인 주체 변경 : 정부→민간 벤처금융기관</li> <li>○ '05. 10월, Inno-Biz 지정업체 766개사</li> <li>○ '05. 3월, 신청·컨설팅 선택 등 전 과정을 온라인화, 쿠폰 구매시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li> <li>○ '05. 7월, 각 부처 창업보육사업을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마련</li> <li>○ '05. 6월, 기술력 있는 창업자에게 교육-자금-입지-컨설팅을 일괄 연계 지원</li> <li>○ 사업전환 중소기업 실태조사('05.7~11, 2,000개사)</li> <li>○ 사업전환 지원대책 수립 및 법률제정('05.12) * 사업전환 지원자금 확보, 사업전환촉진법 제정 추진 등</li> <li>○ '05. 10월, 체제비 지급방식 개선, 지원한도 상향조정 등</li> <li>○ '05. 1월, 청년 미취업자 대상 직무교육후 취업알선(5,500명)</li> <li>○ '05. 4월, 16개 공고 시범 실시</li> <li>○ '05. 7월, 성능인증, 성능보험, 구매자 면책제도 도입 * 등급별 경쟁, 분리구매, 구매목표비율제도 등은 '06년 시행</li> <li>○ '05. 4~12월</li> <li>○ 디지털데이터방송(T-Commerce) 사업권 확보('05.3), 전담법인 설립('05.6), 방송 개시('05.12)</li> <li>○ 대기업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확대(7개 대기업)</li> <li>○ Netwokr Loan 참여기업 세액공제 지원(592개 모기업)</li> <l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박람회 개최('05.10)</li> <li>○ 자금지원 확대(3,500억원→5,100억원), 특별보증(1조원)</li> <li>○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 수립('05. 3)</li> <li>○ 시장경영지원센터 설치('05. 3)</li> <li>○ 온라인 쇼핑몰(everymarket) 구축('05. 9)</li> <li>○ 공동상품권 발행 시범 지원(3억원), 박람회 개최('05.11)</li> </ul>